

금융위기 이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변화 및 시사점

2011. 11.

연구위원	김한수
선임연구원	김보영
연구원	정은경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序 言

한국은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동북아 3대 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정책을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등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각에서는 국제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만연하고 있으며, 정부의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 또한 점차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금융 정책 방향은 기존의 자유화·규제완화의 방향에서 위험관리 강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금변 위기 이후 국제 사회는 조세차익 및 규제완화 등의 특혜 제공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추진국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센터를 지향하는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 상황 악화 정도 및 금융규제 자유화 정도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방향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였으나,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에 있어서는 이전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하에서 그동안 국제금융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금융 선진 국가들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 산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4개의 글로벌 금융센터들(싱가포르, 아일랜드, 호주, 영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 4개 국가들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금융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 경제에서 금융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금융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 및 자국 금융업이 받은 영향 정도 등에 의해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 발전 관련 정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동안 과도하게 금융업을 키워 온 아일랜드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아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싱가포르와 호주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자국의 금융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변화된 환경 하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시장의 확대와 함께 자산운용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기존 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 전략의 지속적으로 추진, 금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금융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 연구원의 김한수 연구위원과 김보영 연구원, 정은경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부분 참여한 IMF의 김민석 박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본 보고서의 지정 논평을 맡아준 현석 박사, 원고를 꼼꼼히 읽고 많은 조언을 해준 연구조정위원들과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한 한송희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 개인의 견해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11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형태

목 차

Executive Summary	ix
Abstract	xiii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구성	6
II.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 평가 및 경쟁력 현황	9
1.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진행 상황 및 평가	9
2. 금융중심지 경쟁력 일반 현황	16
3. 한국의 역내 경쟁력 현황 및 부문 별 경쟁력	19
III. 금융위기 이후 주요 해외사례 재조명	25
1. 싱가포르	25
2. 호주	37
3. 아일랜드	49
4. 영국	69
IV. 금융중심지 전략 추진시 고려사항	83
1. 조세경쟁력 제고	83
2. 성공적인 금융클러스터 조성	99
3.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자산운용업 발전 전략	101
4. 신성장 전략의 채택	124

V. 정책적 시사점	131
1. 자산운용업 육성 전략의 지속적 추진	131
2. 클러스터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133
3. 금융과 실물경제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135
4.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 및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틀	136
5. 적극적인 해외진출 필요성	139
 Appendix	 145
 참고문헌	 155

표 목 차

<표 I-1> 아시아 주요도시 GFCI 순위 변화	4
<표 I-2>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GDP증가율 변화 추이	5
<표 II-1> 금융중심지 4대 추진과제 세부내용	13
<표 II-2> 아시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평가순위	18
<표 II-3> 경쟁력지수별 아시아 주요 도시 순위 비교	19
<표 II-4> 금융업권별 서울의 경쟁력	20
<표 II-5> 아시아 주요국의 자본시장 접근성 지수	21
<표 III-1>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비중	25
<표 III-2> 싱가포르 금융기관 수	28
<표 III-3> 싱가포르의 금융 및 국가경쟁력	31
<표 III-4> 호주 금융자산 규모	38
<표 III-5> 호주 금융산업 해외진출 현황	41
<표 III-6> 도시별 금융인력 비교	43
<표 III-7> 아일랜드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49
<표 III-8>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54
<표 III-9>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감축안	55
<표 III-10> 아일랜드 주요 거시경제 지표	56
<표 III-11> 운용사별 캡티브보험사 수	64
<표 III-12> 더블린의 GFCI 경쟁력 추이	66
<표 III-13> 아일랜드 국제금융서비스 업무 관련 종사자 수	68
<표 III-14> 더블린 IFSC SWOTs 분석	69
<표 III-15> 영국 금융산업의 지역별 고용과 생산성	71
<표 IV-1> 더블린 금융중심지 발전에 기여한 조세정책적 요인	83
<표 IV-2>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85

<표 IV-3> 주요 금융중심지 각국이 적용받는 국제기구 조세관련 규제조항	87
<표 IV-4> 주요 금융중심지 법인세율	87
<표 IV-5>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 비교	88
<표 IV-6>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율감면 규정	89
<표 IV-7> OECD 국제조세기준의 원칙	93
<표 IV-8> 조세회피국 리스트 해당여부 비교(일부국)	95
<표 IV-9> 조세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96
<표 IV-10> 도시별 세율비교	97
<표 IV-11> 호주 퇴직연금의 유형별 현황	103
<표 IV-12> 호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현황	106
<표 IV-1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가입자 변화	107
<표 IV-14> DC형 및 IRA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111
<표 IV-15> DB형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112
<표 IV-16>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방법별 적립금 비중	113
<표 IV-17> 국내 퇴직연금의 제도 가입 유형별 분포	113
<표 IV-18> 호주와 한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15
<표 IV-19> 국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수	117
<표 IV-20> 한국의 금융자산	118
<표 V-1> 국민연금 위탁투자 비중 추이	132

그 립 목 차

<그림 II-1>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9
<그림 III-1>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및 금융산업성장률	26
<그림 III-2> 각국의 운용자산 규모	38
<그림 III-3> 호주 금융산업 종사자 규모 추이	39
<그림 III-4>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	40
<그림 III-5> ISEQ Equity Index Series	51
<그림 III-6> 아일랜드 부분별 민간대출	51
<그림 III-7> 아일랜드에 등록된 UCITS 펀드	60
<그림 III-8> 금융위기 후 IFSC내 입주 은행 자산 및 자본금 규모 추이(2008)	62
<그림 III-9> 금융위기 후 아일랜드 펀드 등록 현황	63
<그림 III-10> 영국 GDP 구성 추이	70
<그림 IV-1> 호주 퇴직연금 자산규모 추이	107
<그림 IV-2>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108
<그림 IV-3>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117
<그림 IV-4> OECD 국가의 GDP대비 연금자산 규모(2008)	119
<그림 IV-5> OECD 국가 연금펀드의 자산배분(2008)	120
<그림 V-1>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투자자 비중 추이(시가총액)	141

《 Executive Summary 》

한국은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수립·발표 이후 동북아 3대 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에 따라 정부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지구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으며,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과도한 금융산업의 경쟁 및 팽창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국제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번 위기를 통해 국제사회는 조세차익·규제차익 기회제공을 통한 불공정 경쟁이 만연하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이 과연 전반적 경제의 시스템리스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각기 다르게 전략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4개 주요도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매우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싱가포르이다.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건실한 실물경제를 보유한 균형 잡힌 금융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호주는 비교적 금융위기의 여파가 덜 했던

지역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호주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이전 보수정권에서 추진한 전략으로, 2007년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을 고려할 때 최근 호주의 금융중심지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금융위기로 전세계 국제금융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중심지정책을 재창하였다라는 점에서 호주 정부가 금융중심지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호주는 이후 수차례 회의 및 발표를 통해 기존 자산운용허브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과세제도 정비, 새로운 육성분야로서 탄소거래허브 육성, 그리고 새로운 국제금융업무지구 개발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허브육성, 금융지구 개발, 이슬람금융 관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금융중심지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향후 역내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에 대비하여 역내 헤지펀드허브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체평가에서 홍콩과 비교해 대형 헤지펀드의 진출이 미진하였던 부분의 보완을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새로운 금융지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2010년 입주가 시작된 Marina Bay Financial Centre의 성공적 개발에 이어, 향후 20년간 남동부 지역인 Nepal Hills 지역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Nepal Hills 지역의 개발은 “아시아의 Greenwich”라는 역내 헤지펀드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호주 및 싱가포르가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금융중심지전략을 수립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대표적 신흥 금융중심지로 급성장을 지속해온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금융중심지전략이 점차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펀드서비스센터로서 급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과도한 조세혜택 및 금융산업 육성에 따른 부동산 버블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간 지속해온 금융중심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다.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의 주요도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 수립과 금융클러스터의 개발 등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경제위기가 점차 심화되는 유럽에서는 기존 전략의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금융중심지전략 추진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8년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후 구체적 목표 설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한국이 다음의 노력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선,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의 기본 틀인 자산운용특화허브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자산운용시장은 한국의 연금시장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에 금융중심지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금융클러스터의 조성은 호주, 싱가포르 등 금융위기 이후

이미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시행중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한국은 이미 진행 중인 클러스터 조성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의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등의 구체적 목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를 전면 재편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틀을 지속한다면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궁극적으로 금융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금융기업의 국내 유치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Since Korea announced plans to build a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in 2003, it has exerted diverse efforts to develop one of the three main Asian financial centers in Korea. The country enacted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Act in 2008. The law established the Financial Hubs Establishment Committee and designated two districts - Moon-hyun in Busan and Yeoido in Seoul - as financial centers. In addition, Korea announced a three-year master plan that provides a framework for a system under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government ministries, and municipalities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the goal.

However, government efforts have decreased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Since the global economy was hit hard by excessive competition and expans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re has been skepticism about the need to build a financial hub. Specifically, discussions have focused on whether a financial hub is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ic risk at a time when tax and regulatory arbitrage from a financial hub strategy are criticized as a form of unfair competition. Against the backdrop,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four major cities that unfolded differentiated strateg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then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Korea.

First, we can look to Australia and Singapore, which have pushed forward with aggressive financial hub strategies. With a healthy financial system and sound real economy, Australia avoided the worst of the recent financial crisis. Recently, the Australian government reiterated its intention to continue its existing financial hub plan. It wa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at first announced the financial center plan, but the plan continued even after the Labor Party took office in 2007. What makes the Australian case more meaningful is that it reiterated its previous plan even whe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suffered a recession. This well demonstrates Australia's strong commitment to its plan. After some meetings and announcements, Australia presented concrete goals, such as renewing its tax system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an asset management hub, nurturing a carbon trading hub, and developing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district.

Since the financial crisis, Singapore also implemented various financial center strategies, including nurturing a hedge fund hub, developing a financial district, and expanding its support for Islamic finance projects. Most notably, Singapore intensified efforts to establish a regional hedge fund hub to prepare for the growth of the regional hedge fund market. In its internal evaluation, Singapore lagged behind Hong King in terms of hedge funds.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 it is providing more tax benefits and developing a new financial

district. After successfully opening the Marina Bay Financial Centre, which began operating in 2010, the Singapore government has rolled out its 20-year plan to develop its southeast region, Nepal Hills. The Nepal Hills project is carried out i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under the goal of developing a regional hedge fund hub that will become “Asia’s Greenwich.”

In contrast to Australia and Singapore, Ireland, a financial center in Europe, showed rapid growth but lost momentum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he past, Ireland was able to grow fast as Europe’s fund service center. However, it faced a serious economic crisis that resulted from excessive tax benefits and a real estate bubble. Due to such adverse effects, the existing financial center policy has lost confidence and support.

While Asian nations, including Singapore and Australia, have renewed their strategies and developed their financial cluster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s financial centers, the deepening economic crisis in Europe has made it difficult for most European nations to maintain even the status quo. Korea, meanwhile, successfully recovered from economic shocks from the global crisis, but is still inactive in its financial hub strategy. This goes back to 2008 when Korea first set out its goal of enhancing its financi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a financial cluster, but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The study of overseas cases implies that Korea should renew its efforts to create a financial hub successfully. First, Korea should maintain the basic framework, which is the asset management hub strategy. With the apparent future growth of Korea's pension market, the asset management market is expected to grow as well. In line with the existing hub strategy, Korea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s to create more value in this area. Second, the existing strategy to create a new financial cluster, which has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Act, should continue. All other nations, including Australia and Singapore, that showed an aggressive stance in building a financial hub in the post-crisis era, have built new financial clusters. Korea also should keep up with its existing financial cluster strategy. To do so, the Financial Hubs Establishment Committee should review how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can increase cooperation, and present concrete goals, e.g., the establishment of clusters.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eveloped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reformed their financial regulations. Although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sustained soundness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needs to maintain its regulatory framework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is will help Korea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lso noteworthy is that Korean financial firms' advancement to foreign markets will eventually help solidify Korea's status as a financial hub. Therefore, Korea needs to encourage more Korean financial firms to go abroad, as well as attract more foreign financial firms to do business in Korea.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전 세계 주요 금융도시의 위상이 급격히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뉴욕, 런던 등 전통적인 국제금융 중심지의 위상 자체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나, 두바이·더블린 등 신흥 국제금융중심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치명적
 - 이러한 최근의 경험은 신흥 국제금융중심지 도시들의 취약한 인 프라와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우리의 금융중심지 전략 재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 강국인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의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아시아 주요 도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상승
 - 미국 및 유럽의 주요도시는 금융규제체제의 개혁 및 세제 개혁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반면 아시아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크게 상승

4 금융위기 이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변화 및 시사점

- 런던시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표적인 금융중심지경쟁력지수인 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는 이미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되어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 도시의 순위는 대폭 상승

<표 I-1> 아시아 주요도시 GFCI 순위 변화

	GFCI 5	GFCI 6	GFCI 7	GFCI 8	GFCI 9	GFCI 10
홍콩	4	3	3	3	3	3
싱가포르	3	4	4	4	4	4
심천	5	5	9	14	15	25
동경	15	7	5	5	5	6
상하이	35	10	11	6	5	5
북경	51	22	15	16	17	19
타이페이	41	24	21	19	19	23
서울	53	35	28	24	16	11
오사카	52	38	34	30	31	26
쿠알라룸푸르	45	45	51	48	45	38

주 : GFCI 5(2009년 3월), 6(2009년 9월), 7(2010년 3월), 8(2010년 9월), 9(2011년 3월) GFCI 10(2011년 9월) 발간

자료: GFCI, The Z/Yen Group of Companies

- 비록 아시아 금융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역내 주요국들은 향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정이 힘든 실정
 -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제한적이었으나, 역내 주요국은 총생산 감소, 주가 급락, 통화가치 하락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
 -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해외자본 유출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표 I-2>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GDP증가율 변화 추이

	2007	2008	2009(7월)	변화 (2007-2009)
아시아 개도국	10.6	7.7	5.5	-5.1
ASEAN 5개국	6.3	4.9	-0.3	-6.6
아시아 신흥국	5.7	1.6	-5.2	-10.9
중부 및 동구 유럽	5.4	2.9	-5.0	-10.4
서유럽 및 북미	5.7	4.2	-2.6	-8.3
전세계	5.2	3.2	-1.4	-6.6
선진국	2.7	0.9	-3.8	-6.5
신흥국 및 개도국	8.3	6.1	1.5	-6.8

주 : 1) 아시아 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 역내 23개국을 포함
 2) ASEAN 5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3) 아시아 신흥국은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4국을 지칭

자료: IMF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변화 및 움직임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중심지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의 주 벤치마크 대상인 싱가포르와 호주 등의 최근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금융중심지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추진 전략의 보완 방향을 설정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

- 한국의 국제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성과 분석
- 해외 주요 국제금융중심지 추진국의 최근 움직임 분석
- 향후 국제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보완의 필요성 및 내용
- 정책적 시사점

II.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 평가 및 경쟁력 현황

1.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진행 상황 및 평가
2. 금융중심지 경쟁력 일반 현황
3. 한국의 역내 경쟁력 현황 및 부문 별 경쟁력

II.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 평가 및 경쟁력 현황

1.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의 진행 상황 및 평가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을 동북아의 주요 금융중심지¹⁾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 동 전략은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의 성장을 목표로 3단계에 걸친 추진전략을 포함

<그림 II-1>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자료: 기획재정부((구)재정경제부), 2003(12.11)

1) 법률용어의 한글화 정책 기조에 맞추어 당초 ‘금융허브’라는 명칭이 ‘금융중심지’로 변경되었음, 이에 본고에서는 2006년 11월 이전까지의 추진전략 관련 내용 서술에서는 ‘금융허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기획재정부((구)재정경제부), 2006(11.15)

10 금융위기 이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변화 및 시사점

-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2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3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
 -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는 금융허브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재검토 등을 논의함
 - 또한 2007년까지 매년 개최된 경제부총리 주재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허브 7대 추진과제의 추진 실적 및 과제를 세부 점검
 - 7대 추진과제; ①자산운용업 육성 ②금융시장 선진화 ③지역특화금융 개발 ④Global Network 강화 ⑤한국투자공사 설립 ⑥규제·감독시스템 혁신 ⑦경영·생활환경 개선

- 2007년 완료된 금융허브구축 1단계 전략은 과제 이행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목표인 금융허브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퇴직연금제 시행, 자본시장법 제정, 한국투자공사 출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등은 괄목할만한 성과
 -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응답하며 한국의 금융허브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36.5%)²⁾
 - 특히, 경직적 규제감독시스템(42.9%), 금융허브로서 적극적 유인책 부족(23.0%) 등이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2) 2007년 1월, KDI가 국내거주 외국인 금융종사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기획재정부((구)재정경제부), 2007(7.18)

- 이에 정부는 2007년 7월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통해 금융허브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
 - 금융선진화를 위한 4대 과제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음;
 - ①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 은행지배구조 개선, 보험업 제도 개선
 - ② 자산운용업 육성: 자산운용업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로드맵 마련
 - ③ 금융회사 해외진출: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 ④ 금융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KRX 상장, 금융중심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금융법령 영문화

- 또한 2008년 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함
 - 동법을 통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 간 의견조정을 제도화하여 범 부처와 국내·외 금융회사를 망라한 실질적 협력이 가능해짐

- 이후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을 발표³⁾
 - 계획안에서는 기존 금융허브 로드맵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된 금융환경과 정책을 반

3) 금융위원회(2008.6)

12 금융위기 이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변화 및 시사점

영하여 금융중심지 4대 추진과제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새로이 제시

- 금융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규제선진화, 금융당국 쇄신, 금융산업 역량 강화를 제시
- 금융인프라 선진화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외환시장 제도 개선, 금융인력 양성 방안 등을 제시
- 자산운용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시장 참여 활성화, 자본시장 국제화, 채권시장 고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자산운용수요 기반 확충 등을 제시
- 금융시장 집적요건 조성과 관련하여 금융클러스터 조성, 경영환경개선, 외국전문인력 유치, 생활거주환경 개선, 영어사용환경 조성 등을 제시

<표 II-1> 금융중심지 4대 추진과제 세부내용

영역	대과제	추진과제
금융산업 선진화	[1] 수요자중심의 규제·감독서비 스 구축	1.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 2. 감독당국 인적쇄신 및 감독역량 강화 3.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서비스 구축
	[2] 금융산업 제도 개선	1. 금산분리완화 2.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3. 예금보험제도 개선 4.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
	[3]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 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1.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2. 보험사 업무범위 확대 3. 금융회사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4.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 육성 5. KIC 투자 활성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1] 자본시장인프라 개선	1. 전자증권제도 도입 2. 상장제도 선진화 3.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2] 외환시장제도 개선	1. 외환거래 자유화 2. 원화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3] 금융전문인력 양성	1. 금융인력 양성 기초인프라 정비 2. 인력양성기관 개선
자산운용 시장 육성	[1]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1. 자산운용업의 전문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 2. 은행·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시장 참여 활성화 3. 헤지펀드 도입 4. 펀드 판매채널 확대 5. 퇴직연금 활성화
	[2] 자본시장의 국제화	1. 외국기업 상장 유치 활성화 2. 아시아신흥국 거래소설립 지원 및 IT시스템 수출 3. 해외거래소와 선물시장 연계 추진 4. 다양한 파생상품(선물, ETF등) 도입 추진
	[3] 채권시장의 고도화	1. 합성 CDO 발행 허용 2. 회사채 정보 집적 인프라 구축
	[4] 지역특화 금융 수요 개발	1. 구조조정시장 활성화 2. 동북아 개발금융 참여 강화 3. 선박금융지원 확대

<표 II-1> 금융중심지 4대 추진과제 세부내용(계속)

영역	대과제	추진과제
금융회사 집적요건 조성	[1] 금융클러스터 조성 지원	1. 금융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2. 금융클러스터 지역 건축규제완화 3. 금융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4. 금융클러스터 입주 금융회사 지원센터 설립
	[2] 금융회사 및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1. 서울하향조정 2. 금융관련세제 합리화 3. 조세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4.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시장개방 추진 5. 회계서비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계시장개방 추진
	[3] 외국 전문인력 유치	1. 해외 금융전문인력 유치여건 조성 2. 취업비자 및 영주권 발급 완화
	[4] 외국인 생활거 주 환경 개선	1. 외국인학교 설립 제한 완화 2. 외국어 사용이 편리한 외국인 전담 진료소 확대 3.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5] 영어 사용환경 조성	1. 영어라디오 방송 확대 2. 금융법령 및 각종 공문 영문으로 제공 3. 영어교육 강화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따라 중앙 정부는 금융클러스터 조성 지원
을 위해 다음의 과제를 이행

- 2008년 9월, 국내·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국내진입을 촉진
하고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추진기구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Fn Hub Korea)를 설립
 - 또한 2009년 5월에는 부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개소
- 2009년 1월,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로 서울 여의도(종합금융중
심지)와 부산 문현(특화금융중심지)을 지정⁴⁾

4) 금융위원회, 2009(1.21)

-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최근 이행과제
 - 정부의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추진계획(2009.5)」에 따라 2010년부터 '녹색금융 특화 MBA'를 선정하여 지원
 - 정부는 2009년부터 추진한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은행업 등 업권별로 특화된 강좌를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 해외전문인력 유치 관련 이행 최근 이행과제
 - 2010년 3월, 외국인 금융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를 발급
 - 2010년 9월, 국내금융사의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2010 FSS Korean Finance Job Fair」를 뉴욕과 LA에서 개최

- 금융감독 법규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 영문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영어사용환경을 조성
 - 2010년 7월, 외국금융회사와 외국인의 업무 편의 및 금융규제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금융감독법규의 영문화 및 인허가·금융거래 관련 영문안내서를 발간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2. 금융중심지 경쟁력 일반 현황

- 2007년 말을 기점으로 금융허브 추진전략 1단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허브 경쟁력은 경쟁 도시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었음
 - GFCI⁵⁾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경쟁력 순위는 2009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각 도시의 순위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한국의 금융허브 추진은 전략 진행이 전반적으로 느리며, 국민의 무관심, 민간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전무함

- 그러나 최근 한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순위는 급상승 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자체적 노력이기 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향후 국제금융시장 중심지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최근 GFCI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센터들의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동경, 상해 등은 Top 10 센터로 진입하는 등 전반적인 아시아 센터의 상대적 경쟁력 상승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GFCI(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Z/Yen Group이 런던시의 의뢰를 받아 6개월 주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도시의 금융경쟁력 지수로 2007년 3월 첫 GFCI 1을 발간한 이래 2011년 9월 GFCI 10이 발간됨

- 한국은 자본시장의 양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이 평가되어 왔으나, 설문 등을 기초로한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음
 - 일반적으로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공공부문 및 정부, 금융전문인력 및 인프라, 생활환경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포함한 종합지수를 고려
 - 서비스 측면에서 금융 수요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GFCI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연구원(2007), Mastercard Worldwide(2007, 2008)은 양적 평가요소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
 - GFCI 평가에서는 자본시장의 양적 성숙도를 금융중심지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등은 각국의 각기 다른 자본시장의 양적 성숙도를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포함

-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 베이스인 GFCI에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은 역대 금융중심지 사이에서 급상승 하고 있음
 - GFCI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비교대상도시 중 최하위권⁶⁾으로 평가 받았던 사실을 고려해볼 때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또한 새로운 금융센터로 성장가능성을 묻는 설문 항목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 불과 2년 전까지도 동 항목에서 서울은 순위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 피설문자는 서울에서의 사업 확장 계획이 전무

6) 2007년 3월의 경우 서울의 경쟁력은 전체 53개 대상 도시 중 49위를 기록

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경쟁력에 대한 해외 시각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라 판단됨

— 물론 국제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은 지수 구축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특히 서울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던 GFCI의 순위 상승은 국제금융시장 업계 종사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

- GFCI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합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GFCI 순위상승은 해외 금융업 종사자의 시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표 II-2> 아시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평가순위

GFCI	1	2	3	4	5	6	7	8	9	10
	2007.03	2007.09	2008.03	2008.09	2009.03	2009.09	2010.03	2010.09	2011.03	2011.09
싱가포르	4	4	4	3	3	4	4	4	4	4
홍콩	3	3	3	4	4	3	3	3	3	3
동경	9	10	9	7	15	7	5	5	5	6
시드니	7	9	10	10	16	11	9	10	10	15
상하이	24	30	31	34	35	10	11	6	5	5
타이페이					41	25	21	19	19	23
북경	36	39	46	47	51	22	15	16	17	19
서울	43	42	51	48	53	35	28	24	16	11

자료: GFCI, The Z/Yen Group of Companies

7) GFCI 5(2009)의 추가 설문사항 중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신금융허브에 대한 문항에서 대부분의 피설문자는 싱가포르, 두바이, 상하이, 홍콩, 베이징 등을 지목함

3. 한국의 역내 경쟁력 현황 및 부문 별 경쟁력

- 아시아 역내 도시 중 한국은 자본시장경쟁력 분야에서 역내 중·하위권 금융중심지에 비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상위권 도시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시장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내 경쟁 도시인 동경,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와는 격차가 존재
 - 금융산업 부문별로는 자산운용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역시 역내 중위권 수준

<표 II-3> 경쟁력지수별 아시아 주요 도시 순위 비교

	Mastercard 2007	Mastercard 2008	SIFIC 2007
1	동경(3)	동경(3)	싱가포르
2	홍콩(5)	싱가포르(4)	시드니
3	싱가포르(6)	홍콩(6)	동경
4	서울(9)	서울(9)	홍콩
5	시드니(14)	시드니(12)	서울
6	상하이(32)	오사카(19)	쿠알라룸푸르
7	방콕(36)	타이페이(22)	타이페이
8	쿠알라룸푸르(38)	상하이(24)	뭄바이
9	뭄바이(45)	방콕(42)	방콕
10	베이징(46)	쿠알라룸푸르(50)	북경
11	-	베이징(57)	상하이
12	-	뉴델리(61)	마닐라
13	-	자카르타(68)	자카르타

주 : 괄호 안은 해당 보고서의 순위
 자료: Mastercard(2007, 2008), SIFIC(2007)

<표 II-4> 금융업권별 서울의 경쟁력

	자산운용업	은행업	보험업
1	홍콩	싱가포르	동경
2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
3	시드니	시드니	홍콩
4	동경	동경	시드니
5	서울	상하이	상하이
6	오사카	베이징	베이징
7	상하이	서울	서울
8	베이징	오사카	오사카

자료: Yeandle et al(2008)

- 자본시장경쟁력을 제외한 정부효율성, 노동시장 경쟁력, 비즈니스 인프라 및 삶의 질 등은 역내 경쟁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⁸⁾
 - 특히, 노동력의 국제화와 관련된 국제 업무 경험, 영어능력 등에서 역내 최하위를 기록

- 정부효율성 부문에서 한국은 역내 중·하위권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제도 측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특히 규제 불투명성 등 집행과 관련된 부문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내시장 접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8) 강형철 외(2007)

<표 II-5> 아시아 주요국의 자본시장 접근성 지수

(단위: 순위)

	2006	2007	2008
홍콩	1	7	3
싱가포르	2	4	5
호주	6	8	9
한국	20	19	12
말레이시아	12	13	13
일본	16	15	15
타이완	34	25	24
태국	19	26	32
중국	47	45	45
인도	46	41	47
인도네시아	63	64	65

자료: Capital Access Index 2008

□ 한국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연구원과 Z/Yen Research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은 취약분야의 개선만으로는 역내 상위도시와의 격차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동북아 3대 금융허브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취약분야인 자본시장 하부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동시다발적 전략의 채택이 필요

9) 자본시장연구원과 GFCI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Z/Yen Research와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서울의 가장 취약한 경쟁력 분야의 가상 점수를 역내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역내 상위 도시와의 경쟁력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

Ⅲ. 금융위기 이후 주요 해외사례 재조명

1. 싱가포르
2. 호주
3. 아일랜드
4. 영국

Ⅲ. 금융위기 이후 주요 해외사례 재조명

1.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금융산업 현황

- 금융위기의 여파로 싱가포르 경제는 유례없는 경기하강을 겪은 후 점차 회복세로 전환
 - 제조업의 경우 2009년 1분기 이후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 경제에서 1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산업 부문 또한 2007년 이후 성장률이 급감하였으나, 2008년 9월을 정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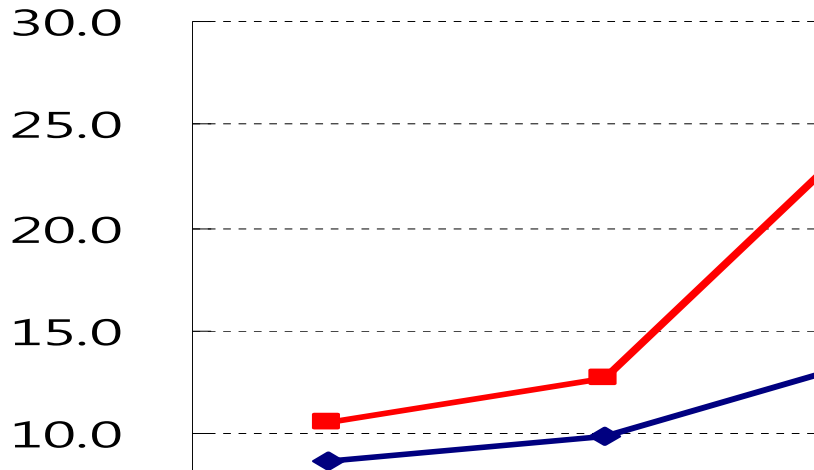
<표 Ⅲ-1>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8				2009	
					Q1	Q2	Q3	Q4	Q1	Q2
금융산업 비중	10.9	11.2	12.4	13.1	13.4	13.7	12.9	12.5	14.9	14.0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그림 III-1>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및 금융산업성장률



자료: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 비교적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구제금융 및 금융기관 파산 등 극단적 위기상황은 발생하지 않음

-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의 수는 위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
- 특히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 및 규제가 적용되어 유동성, 자본적절성, 수익성 등이 건전한 상태로 유지됨¹⁰⁾
- 정부의 감독·규제와 더불어 싱가포르 금융기관의 자체 위험관리 시스템이 견고하여 위기 시 충격에 강한 내성을 보유

10) 싱가포르의 은행은 역외금융 계정인 Asian Currency Units(ACU)와 국내 은행업무 계정인 Domestic Banking Units(DBU)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ACU 계정에 대해서만 과세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제공하고 DBU 계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감독을 시행

- 향후 발생할 신용위험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국내은행의 Tier 1 자본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주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감독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

- 국내은행자산의 54%를 차지하는 외국계은행(대부분이 지점형태)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본사 소재국 감독기관의 동의 아래 긴급 유동성 지원합의를 도출
-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금융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500억 싱가포르 달러 한도의 개인예금보호조치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표 III-2> 싱가포르 금융기관 수

금융기관 분류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	111	108	108	113	114
Local	5	5	5	6	6
Foreign	106	103	103	107	108
Full bank ¹⁾	24	24	24	24	27
Wholesale banks ²⁾	35	34	36	42	41
Offshore banks ³⁾	47	45	43	41	40
Asian Currency Units	153	151	154	158	160
Banks	106	104	106	111	111
Merchant Banks	47	47	48	47	49
파이낸스컴퍼니 ⁴⁾	3	3	3	3	3
머천트뱅크 ⁵⁾	48	48	49	49	50
보험업	140	149	153	151	158
Direct insurers	55	56	61	59	62
Professional reinsurers	28	28	27	25	27
Authorized reinsurers ⁶⁾	0	5	5	5	6
Captive insurers	57	60	60	62	63
보험중개업 ⁷⁾	61	63	62	65	66
외국은행 대표사무소	45	42	43	45	36
외국환중개업	10	9	10	10	10
투자자문업 ⁸⁾	56	61	67	69	73
금융투자서비스업	168	171	183	215	221
Dealing in Securities	65	72	77	93	90
Trading in Futures	34	38	40	46	50
Advising on Corporate Finance	30	33	36	37	37
Fund Management	91	92	97	110	113
Leveraged F/X Trading	11	13	14	18	19
Securities Financing	15	16	15	16	16
Custodial Services for Securities	27	31	34	38	40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Mgt	-	-	-	-	1
신탁업	-	-	31	35	38

주 : 매년 3월말 기준

- 1) 은행법에서 허용한 모든 활동이 허가된 은행
- 2) 싱가포르달러로 제공되는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full bank와 같은 업무 수행
- 3) ACU를 통해 거래되는 비즈니스를 위한 은행으로, 은행의 싱가포르 달러 거래는 국내은행계정과 분리되어 처리되며 wholesale bank에 비해 제한된 업무를 수행함

- 4) 파이낸스컴퍼니는 자동차, 소비재, 개인 모기지 등 소규모 대출만 취급하는 금융기관
- 5)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의 주요 업무는 기업금융, 주식 및 채권 인수·발행, M&A, 포트폴리오투자, 경영 자문 및 기타 수수료 기반의 업무 등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 및 대출은 금지되며, 은행 및 파이낸스 컴퍼니, 주주 및 해당 주주가 지배주주인 기업의 예금 및 대출 활동은 허용
- 6) 싱가포르에서 재보험 비즈니스 수행을 허가받은 해외 재보험사
- 7) 보험중개사는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재보험 의무뿐만 아니라, 장기 사고, 의료 등 보험자가 가입한 각종 보험의 대리인 역할을 함
- 8) 투자자문업은 투자상품 자문, 투자상품 관련 리서치 자료 발행, 펀드판매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MAS에서 Licenced Financial Advisers로 분류

자료: MAS

나.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 발전과정

- 싱가포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한 이후 단기간에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수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국제금융센터로 성장
- 먼저, 싱가포르는 1960년대 후반 역외금융시장인 아시안달러시장(Asian Dollar Market) 육성을 통해 아시아 외환시장 중심지로 부상
 - 역외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는 역외금융계정인 ACU(Asian Currency Unit)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역외금융에 대한 차별적 조세혜택 및 규제혜택을 제공
 - ACU 영업 관련 법인세율 혜택(10%, 일반법인세율은 40%), ACU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비거주자의 ACU 예금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 1968년 Bank of America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을 수취하여 아시아 역내 기업들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역외금융업무 개시한 이후 싱가포르는 아시아달러시장의 중심지로 성장

- 1970년대에는 MAS를 설립하여 통화 및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싱가포르는 MAS를 통해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분담했던 금융감독 및 규제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 이후 MAS는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규제방침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진취적인 금융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

- 1980년대 이후 싱가포르는 자산운용업 및 선물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
 - 국내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1981년 설립된 싱가포르투자청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GIC, 이후 GIC로 표기함)은 보유자금의 일부를 외부매니저에게 위탁
 - 1984년 싱가포르 선물거래소(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SIMEX)¹¹⁾ 설립 이후 5년간 선물거래에 따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

- 1990년대 이후 싱가포르는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 외환위기 등으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
 - 1990년대에는 금융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제시장제도 개선 및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마련

11) SIMEX는 이후 1999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와 함께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로 합병됨

— 최근에는 자산운용업 관련 각종 조세혜택, 미들오피스 프로세싱 센터로서의 경쟁력 강화, 이슬람 금융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

□ 싱가포르는 대외의존적인 자국경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체계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가 시스템 전 부분에 걸쳐 현재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표 III-3> 싱가포르의 금융 및 국가경쟁력

	GFCI 10	SIFIC 2007	Mastercard 2008	DB 2011	WEF 2010-11	IMD 2011
1	런던	싱가포르	런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2	뉴욕	시드니	뉴욕	홍콩	싱가포르	미국
3	홍콩	동경	동경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4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	스웨덴
5	상하이	서울	시카고	미국	미국	스위스
6	동경	쿠알라룸푸르	홍콩	덴마크	독일	대만
7	시카고	타이페이	파리	캐나다	네덜란드	캐나다
8	취리히	뭄바이	프랑크푸르트	노르웨이	덴마크	카타르
9	샌프란시스코	방콕	서울	아일랜드	일본	호주
10	토론토	베이징	암스테르담	호주	영국	독일

주 : 1) SIFIC(Seoul's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는 2007년 서울시 금융경쟁력 컨퍼런스에서 자본시장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금융경쟁력 지수
 2) DB(Doing Business)는 기업 제반 환경을 평가하는 지수로 World Bank에서 매년 발간
 3)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는 World Economic Forum에서 전세계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년 발간
 4) IMD(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는 IMD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경쟁력 지표

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5개의 경쟁력 지속 방안을 발표
 - 싱가포르 금융규제 및 체제의 경쟁력을 유지·보수하며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
 - 2012년까지 글로벌회계기준(IFRS) 도입 완료
 - 복잡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양하고 단순한 구조의 상품 등 위기 이후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이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국채발행 활성화를 위해 ATM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국채공모(bidding)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금융발전기금(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을 조성하여 기존의 금융전문인력 육성 정책을 유지
 -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산업을 활성화
 - 위험관리능력의 제고

- 자산운용업 특화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대형 헤지펀드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
 - 아시아 지역의 헤지펀드시장은 향후 2년간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¹²⁾

12) EurekaHedge(May 2010)

- 싱가포르의 기관투자자 30인 이하의 중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조항에서 면제하는 등 중소형 헤지펀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대형펀드의 경우는 홍콩에 상대적 열위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는 조세혜택, 간편한 등록절차, 낮은 인프라 비용 등 홍콩과 견주었을 때 비용, 업무 절차상 많은 장점을 바탕으로 대형 헤지펀드의 싱가포르 진출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활발히 유치할 계획
 - 2007년 말 기준, 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의 대형 헤지펀드 7개사가 진출하여 있으며, 미국의 포레스트 인베스트 등이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
- 특히 Nepal Hill 지역을 새로운 헤지펀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
- 미국 내 헤지펀드 허브인 코네티컷 주의 Greenwich 지역을 벤치마크
 - “One North” 부동산 개발의 일환으로 약 180 헥타르 지역을 향후 20년간 정부주도(JTC, MAS) 하에 개발 계획
-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특화 펀드 유치를 위해 관련 등록
- 인가 체계를 간소화
 - 대체투자 관련 라이선싱 절차를 간소화 한 면제조항을 발효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산업발전기금(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FSDF)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실시

— 동 기금을 통해 싱가포르 금융산업전문가 인증제도(Financial Industry Competency Standards: FICS) 및 금융전문대학원과 연결된 산·학 연계 금융전문가자격 프로그램(Financial Industry Certified Professional: FICP) 등을 도입

• FICS는 싱가포르 소재 주요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

— 또한 동기금을 활용하여 금융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 FGIP(Financial Graduate Immersion Programme)¹³⁾ 및 FGLP(Finance Graduate Leadership Programme) 등을 도입하여 금융부문 고용 감소로 금융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졸업후 현업에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들을 금융기관의 전문포지션(펀드매니저, 트레이더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주도의 금융연구센터를 설치

— 싱가포르국립대학-위험관리센터(NUS_RMI), 싱가포르경영대-Sim Kee Boon 금융경제연구소, 싱가포르경영대-BNP Paribas 헤지펀드연구센터, INSEAD-아태금융연구센터, EDHEC-Risk 연구센터 등 설립

13) 금융산업 위축으로 금융인력 채용이 줄어들자 싱가포르정부가 마련한 금융 전공 대학원생들의 관련 기관 취업 준비(인턴쉽) 프로그램으로, 금융특화과정(자산운용, 리서치 등)을 공부한 학생들이 향후 전공에 맞는 금융기관의 포지션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학기중에 해당 업무를 현장에서 배우게 함. 향후 산업이 호황기에 들어서면서 채용이 시작되면 이들은 숙련된 경력을 바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과거 역외·해외자금도피형 개인자산관리 허브로서의 오명을 탈피하여 Clean Wealth Management Centre가 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 프라이빗 बैं킹에서 특히 경쟁력을 가진 싱가포르는 스위스식 고객비밀보장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여 왔으며, 이는 영미법에 따른 조세정보 타국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조세회피형, 돈세탁형 금융중심지로 악명을 얻기도 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형 금융중심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싱가포르는 해당 분야의 국제사회합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OECD 조세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
 - 이와 더불어 개인자산관리 허브로서의 명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유럽형 업무방식에서 보다 젊고 세련된 형태의 자산관리서비스 도입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아시아 달러시장(Asia Dollar Market) 중심의 역외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유지
 - 지급준비금 의무 면제, 법인세율 인하(10%), 역외계정 이자소득세 및 원천과세 면제, 역외 대출에 대해 5년간 세금면제 등이 포함

- 새로운 국제금융중심지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종합단지형 금융중심지인 Marina Bay Financial Centre를 개발
 - 32층/46층 두 개 동의 오피스타워와 55층의 주거 및 상가 복합타워로 구성된 Work·Living·Playing 혼합개념의 새로운 종합단지가 2012년 완공 예정

- 2010년 완공된 오피스타워 1동에는 Mcquarie, DBS, Standard Chareterd Bank 등 주요금융회사들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음

- 인근 중동 등 이슬람국가의 잠재적 금융수요에 대비하여 이슬람금융 유치를 통해 향후 이슬람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제 등을 정비
 -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 및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법령을 수정 혹은 필요할 경우 새로 제정
 - “은행법 내에서의 이슬람금융 적용에 관한 원칙(2009)”을 발표하는 등 싱가포르 내 이슬람금융기관에게 싱가포르 은행법 적용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제공
 - 싱가포르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이슬람금융상품 발행을 장려하기 위해 싱가포르 달러화로 발행되는 수쿱(이슬람채권)에 대해 국제와 동일한 세금 및 규제를 적용

- 이슬람금융 확대와 함께 중동 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동 금융기관들의 싱가포르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혜택을 제공
 - 싱가포르통화청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소속 국가 금융당국과도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확대
 - MAS는 카타르금융당국, 두바이금융당국, UAE중앙은행, 카타르중앙은행 등과 MOU를 체결하고, 이들 상호 국가간 금융기관의 자국내 활동에 관한 감독기능, 인력 양성 등을 강화
 - 싱가포르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샤리아에 부합하는 항목들로 구성된 이슬람주가지수를 출범

- 싱가포르는 2009년 제6회 이슬람금융서비스 총회를 개최
- 샤리아 합치(Shariah compliant)¹⁴⁾ 펀드운용 및 대출, 보험 상품 등에 대해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등 유인책 실시

2. 호주

가. 호주 금융산업 일반 현황

- 호주는 각 금융산업별로 아시아 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 수준의 자산운용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금융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총 5조 760억 호주달러로 GDP의 3.6배 수준¹⁵⁾
 - 부분별로 자산운용시장 아시아 1위(세계 4위), 주식시장 시가총액 아시아 7위(세계 11위), 채권시장 규모(잔액기준) 아시아 3위(세계 9위) 등 각 부문에서 아시아 및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14) 이슬람을법인 샤리아(Shariah)에서 정해진 각종 사회·경제적 제약조건에 부합되는 방식으로(Shariah compliant) 운용되는 이슬람 펀드

15)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2011)

<표 III-4> 호주 금융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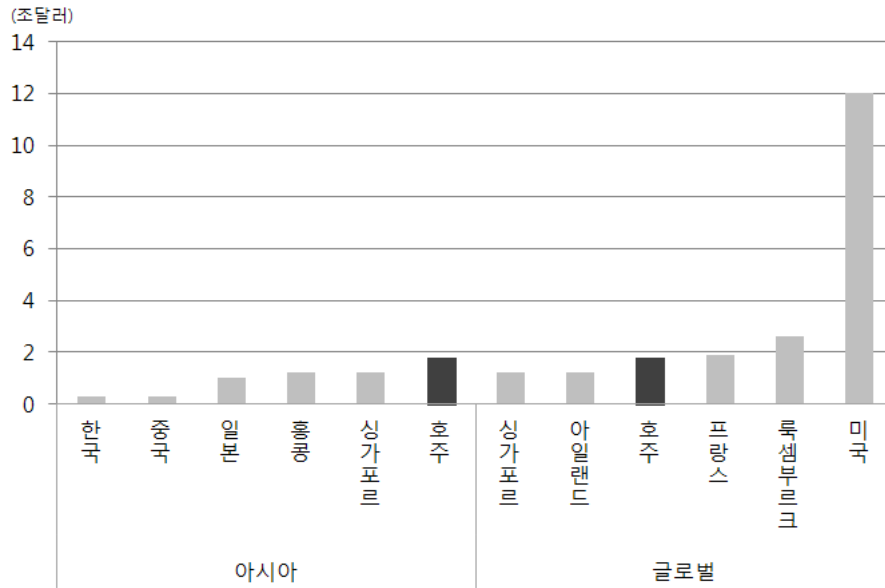
(단위: 십억호주달러)

	총 금융기관 (AFS) ¹⁾	자산운용업	
		총계	퇴직연금펀드 (Superannuation fund)
1991년 6월	754	240	88
1996년 6월	1,059	377	150
2001년 6월	1,942	776	303
2006년 6월	3,522	1,382	590
2011년 6월	5,076	1,824	974
% of GDP	364.8	131.1	70.0

주 : 1) All Financial Systems

자료: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2011)

<그림 III-2> 각국의 운용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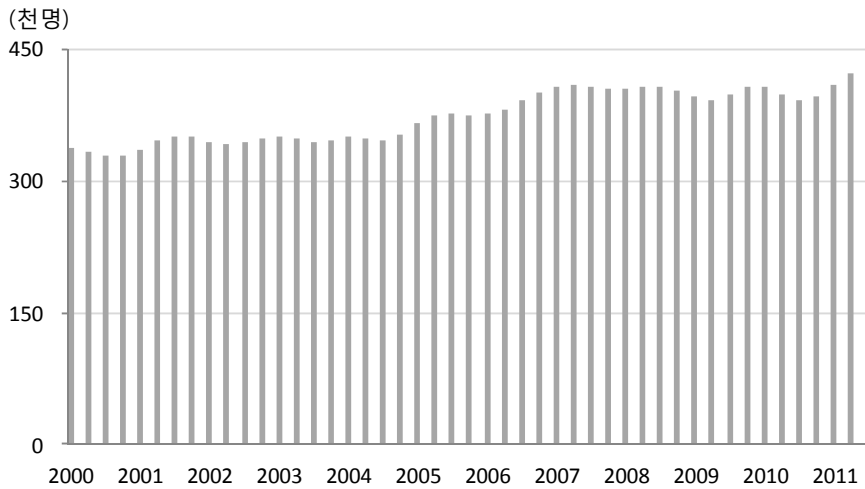


주 : 2011년 3월말 기준

자료: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2011)

- 호주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1,350억 호주달러, 2011년 6월말 기준), 42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¹⁶⁾
 - 금융산업은 1998년~2011년 금융/보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4.9%로, 전체 산업의 평균성장률 3.4%를 크게 앞서는 수준
 - 금융산업 관련 고용인구는 약 42만명이며, 특히 이중 학사 이상의 고학력 근로자의 비중이 41.3%로 전체산업 평균 비중이 26.3%인 것과 비교할 때 금융산업 인력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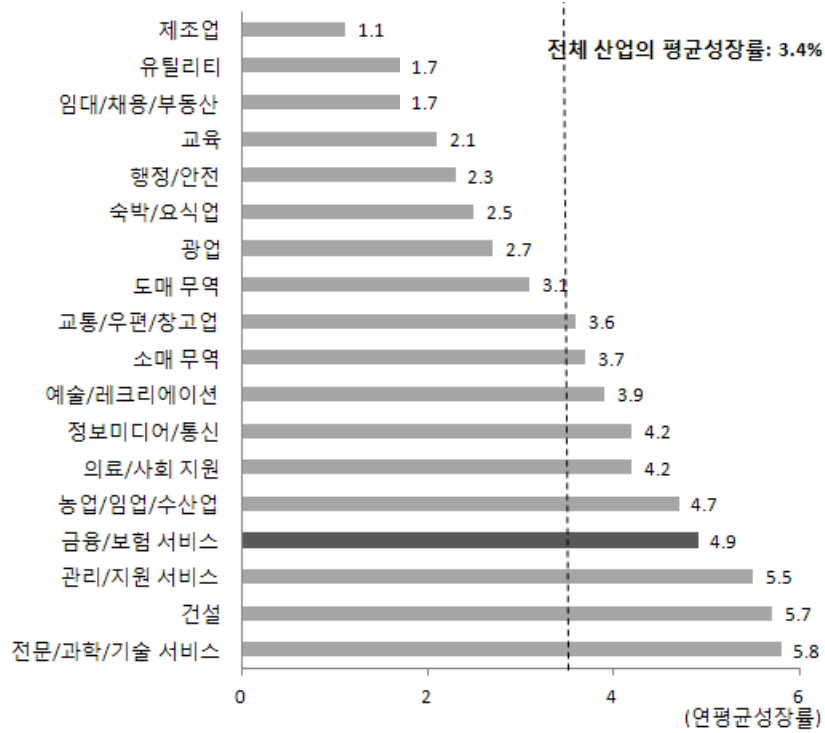
<그림 III-3> 호주 금융산업 종사자 규모 추이



자료: ABS

16)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2011)

<그림 III-4>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



주 : 1998년부터2011년까지의 평균성장률(매년 6월말 기준)

자료: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2011)

- 호주의 금융산업은 특히 자산운용, 인프라 및 부동산 금융, 상품 (Commodities)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 역시 자산운용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표 III-5> 호주 금융산업 해외진출 현황

	자산 운용	은행	부동산 인프라 펀드	금융 자문 서비스	일반 보험	투자 관리	모기지 브로커 서비스	증권 중개 서비스
프랑스						○		
독일	○	○						○
아일랜드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					
폴타		○						
스위스	○							○
영국	○	○	○				○	○
중국		○	○		○	○	○	
홍콩	○	○	○	○				○
인도		○						○
인도네시아		○			○			○
일본	○	○	○					○
한국	○		○					○
말레이시아	○					○		○
뉴질랜드	○	○			○	○	○	
필리핀								○
싱가포르	○	○	○	○		○		○
사모아					○			
대만	○					○		○
태국	○			○				○
베트남		○						
카이만군도		○						
캐나다	○	○	○			○	○	○
미국	○	○	○			○	○	○
브라질	○					○		
남아공								○
오만	○							
아랍에미리트	○	○						

자료: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2010)

나. 시드니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현황

- 시드니는 호주 내 각 금융 관련 유관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제1의 국내 금융중심지
 -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호주금융시장협회(Australian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등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 또한 시드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 풍부한 고학력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미들오피스(middle-office processing) 업무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
 - 2010년말 기준 시드니의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도쿄는 시드니의 1.6배, 홍콩은 3배 정도¹⁷⁾
 - 또한 금융종사자 비중 및 고학력 종사자 수 등에 있어서도 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을 보유
 - 이미 시드니에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객지원(customer support)본부 및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운영본부(operation center) 등이 유치되어 있음¹⁸⁾

17) Austrade's International Data Comparisons(2011.9)

18) 도이치 뱅크의 운영본부(Operation Center)는 주요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센터에서 전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표 III-6> 도시별 금융인력 비교

(단위: 천명)

	멜버른	시드니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인구	4,077	4,576	8,422	7,825	7,068	5,077
고용인구	2,100	2,286	3,627	3,796	3,492	3,047
- 모든 산업						
금융 및 보험산업	90	140	302	333	191	173
총 고용인구 대비 비중	4.3	6.1	8.3	8.8	6	5.7
대학교육 인구	184	265	530	408	110	56
총 인구 대비 비중	4.5	5.8	6.3	5.2	1.6	1.1

주 : 2010년 6월말 기준
 자료: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2011)

-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시드니의 강점은 ① 아시아-태평양 시간대의 영 어권 국가, ② 다국적 고급인력의 존재, ③ 높은 수준의 도시 생활환경, ④ 자산으로는 인프라 및 부동산, 원자재, 업종으로는 자산운용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호주 금융산업 등임

- 반면 시드니의 약점으로는 대외적으로 세율 및 접근성, 대내적으로 은행부문의 과도한 국내편향성과 외국기업 및 투자자들의 호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 부진을 들 수 있음
 - 시드니의 세율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음
 - 호주 및 시드니 금융산업의 국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4개 주요 은행(CBA, NAB, Westpac, ANZ)은 과도한 국내 편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과점적 지위에 만족하여 해외 진출에 관심이 없는 상태

□ 그러나 금융중심지 육성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전략 수립 이후 실제 정책들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뉴욕과 런던 등에 비해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기회

— 세부정책 방안

- 세재개혁: 외국인 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폐지, 금융회사들이 지불하는 세금 항목 축소, 해외진출 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 교육개발 확대: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교육 및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 신설,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비자발급 간소화
- 시장접근성 확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외국정부와 긴밀히 협의
- 규제개혁: 자산운용사와 생명보험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 주정부·중앙정부간 권한 명확화, 정부·감독기구·업계간 협력강화, 은행산업 내 M&A 활성화 유도

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호주의 금융중심지 전략

□ 금융위기 이후 호주 금융시장은 일부 신용경색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상황은 미국 및 유럽 등에 비해 양호하였음

- 4대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높아 미 달러화 조달이나 유동성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자금조달비용은 크게 상승

- 호주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융위기 이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달리 주택을 압류당하더라도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출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90일 이상 연체자가 2007년 15,000가구에서 2008년 17,000가구로 2,000가구 증가
 - 2008년말 모기지대출업체인 알코파이낸스그룹(Allco Finance Group Ltd)¹⁹⁾, 2009년 2월에는 인프라금융전문회사 밥콕 앤 브라운(Babcock&Brown)이 파산
 - 금융회사들이 인력 감축에 나섰으나, 뉴욕과 런던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수준
 -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2008년말 전체 2%에 해당하는 800명을 감축했으며, 맥쿼리그룹(Macquarie Group)의 경우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100명을 감축²⁰⁾
- 호주정부는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관련 고위층 회담(Financial Services Hub Summit)을 개최하는 등 금융중심지 전략에 대한 일관된 추진의지를 보임
- 2008년 7월 31일 시드니에서 열린 회담(Financial Services Hub Summit)은 호주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추진 과제임을 보여준 계기

19) 197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었으며, 2004년 시드니로 본사를 옮겨 500억 달러의 인프라 관련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20) 같은 기간, 런던이나 뉴욕의 인원감축 규모는 몇 만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회담에서 당시 Kevin Rudd 총리는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금융계 최고경영자들과 로드쇼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재무부 차관이었던 Chris Bowen²¹⁾ 역시 시드니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
- 또한 호주 중앙은행의 Ric Battellino 부총재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지사 Morris Iemma 등이 참석하여 금융중심지 전략에 대한 지원을 약속

□ 이후 호주 정부는 재무부 내 호주금융센터포럼(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검토하고 청사진을 제시

— 2008년 9월에 설립된 동 기구는 맥쿼리 인프라펀드 그룹 회장을 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호주의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의 요구사항,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언을 제시하고 있음²²⁾

□ 현재 금융위기 이후 구체화되고 있는 호주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① 탄소거래허브(carbon trading hub), ②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인근의 새로운 금융업무지구 개발, ③ 펀드 과세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21) 호주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추진의 핵심인물인 Chris Bowen은 이후 2009년 6월 이뤄진 내각 개편에서 36세의 최연소 나이로 두개 부처의 겸직 장관으로 입각(재정서비스·연금기업법 및 휴먼서비스)

22) 2009년 11월, 호주 금융허브 경쟁력 보고서인 “Australia as a Financial Centre: Building on our Strength” 발간

1) 탄소거래허브(carbon trading hub) 전략

- 탄소거래허브 전략은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호주 국내에서는 호주증권거래소가 중심지 역할을 수행 중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거래 인프라도 완벽히 구비된 상태
 - 반면, 과거 멜버른을 중심으로 자산운용과 벤처캐피탈 특화 중심지 전략을 추진했던 빅토리아(Victoria) 주정부는 금융중심지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한 상태

2) 새로운 금융업무지구 개발 (Barangaroo 지구)

-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른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를 대신하여 CBD 서쪽의 부두지역인 Barangaroo를 국제적인 금융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Barangaroo지구 개발을 위한 법안²³⁾을 제정하여 사업진행 중
 - CBD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증축 사업이 없어 공실률이 2007년 초 5.6%에서 2008년 초 3%까지 감소했으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Barangaroo 지구는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시드니 금융중심지 육성전략에 따라 처음부터 런던의 카나리워프(Canary Wharf)와 더블린의 도크랜드(Docklands) 등에 필적할 국제금융업무지구로 내세우며 개발에 착수

23)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Act 2009

- 사업 계획에 따르면 Barangaroo 내 22,000명의 상시 인구와 매년 1,200만명의 방문자를 유치할 예정으로, 최대 508,300m²의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될 예정
 - 상업용 면적 398,000m², 주거용 면적 97,075m², 관광용 면적 50,000m², 그 외 소매유통(retail) 면적 39,000m² 등
- 전체 투자 규모는 총 30억 호주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설 착수는 2011년 예정

3) 펀드 과세제도 정비

- 펀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는 2008년 7월 비거주자의 호주 내 부동산 및 인프라펀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고, 3년 후 7.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
 -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의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17% 수준
- 또한 현재 7.5% 수준인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
 - 그 외에도 재무부 산하의 조세 정책 자문기구인 조세위원회(Board of Taxation)에서는 현재 호주의 펀드 관련 과세 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

- 그 외에도 정부 내에서는 노동집약적 후선업무 유치와 이슬람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펀드 사무수탁과 같은 업무는 임대료가 높은 싱가포르 및 홍콩이나 기본적인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에 비해 시드니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

3.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금융산업 현황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 아일랜드는 금융업을 주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년간 EU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지속
 - 특히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일랜드 금융특구인 더블린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IFSC, 이하 IFSC)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아일랜드 주식시장에서 외국이 투자자의 비중이 60%(2007년초)에 달함

<표 III-7> 아일랜드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대비	7.25	7.61	7.58	9.24	9.76	10.12	10.25	10.60

자료: StatCentral.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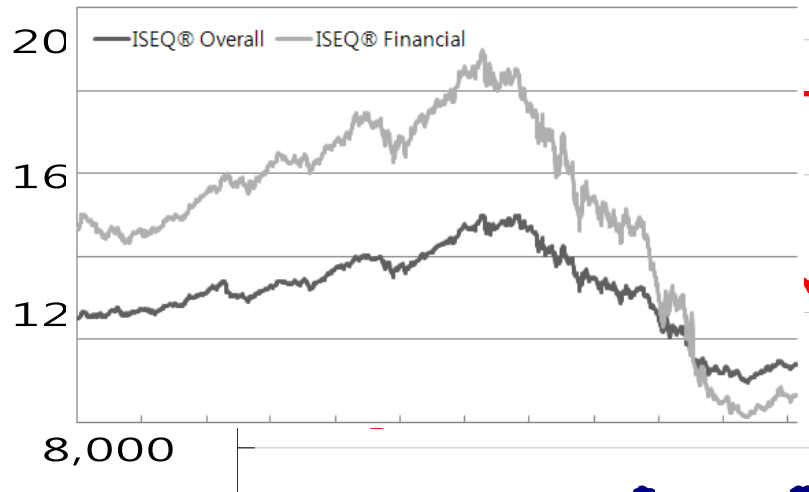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일랜드 경제는 역내 국가 중 가장 먼저 침체에 돌입한 이후 연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08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43,207백만 유로를 기록²⁴⁾

- 주택건설부문의 버블 붕괴는 은행의 거대 손실로 이어졌고, 이는 아일랜드 금융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
 - 아일랜드 은행 대출의 약 50%가 모기지 및 주택건설 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은행의 손실로 이어져 급기야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됨
 - 또한 이로 인해 금융산업 비중이 큰 아일랜드 주식시장의 폭락을 초래
 -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ISEQ Financial Index²⁵⁾가 아일랜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

24) 동기 국민총생산(GNP) 기준으로는 12%감소한 35,598백만 유로를 기록하였음

25) Allied Irish Banks Bank of Ireland, Irish life and permanent PLC, F.B.D. Holdings PLC, IFG Group PLC 등 5개 금융회사로 구성

<그림 III-5> ISEQ Equity Index Series



자료: Irish Stock Exchange

<그림 III-6> 아일랜드 부분별 민간대출



자료: CBFSAI and IMF staff estimates, IMF 보고서(2009) 재인용

- 아일랜드 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은행 유동성 지원책을 실시(IMF, 2009)
 - 2008년 9월 30일, 6개 국내 은행의 예금 및 대출에 대해 GDP의 200%에 달하는 규모의 예금보험 실시
 - 2009년 1월 16일, Anglo Irish Bank 국유화
 - 2009년 2월 11일, 아일랜드 2대 은행인 Bank of Ireland와 Allied Irish Bank에 GDP의 4%에 달하는 70억 유로 지원
 - 2009년 4월, 은행구조조정을 위한 기구인 자산관리공사(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 NAMA)를 설립

-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은행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인해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
 - 은행 정상화를 위한 엄청난 규모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은행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부실 자산을 보유
 -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으로 2010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약 99%(재정적자 GDP 대비 32%)에 달하는 등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
 - 아일랜드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추가 공적자금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시장에서 아일랜드 국채는 이미 신뢰를 상실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짐
 - 특히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2010년 4월) 이후 아일랜드 국채금리는 더욱 치솟음

- 결국 금융시장이 붕괴 국면에 처한 아일랜드는 2010년 11월 구제금융을 신청
 - 2010년 9월, 아일랜드 국채시장 붕괴 및 위험관련 지표가 극에 달하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EU, ECB, 독일 등이 유럽내 위험전이를 우려하여 구제금융 필요성을 제기함
 - 2010.7~11월 사이, 신용평가기관들이 연이어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국채이자율이 급증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일랜드 국채 기피현상이 확산됨
 - 2010년 11월, 당초 구제금융 신청에 부정적이었던 아일랜드 정부는 국채시장 및 주변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함
 - IMF와 EU로부터 총 850억 유로를 지원받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350억 유로, 재정개선을 위해 500억 유로를 집행할 예정
 - 이는 아일랜드 자체 조달금액 175억 유로가 포함된 규모로, 재정적자, 은행자본확충비용, 2011~13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원금 상환금액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규모

<표 III-8>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금액(백만유로)	이자율(%)
IMF	22.5	4.8 ¹⁾
EU	45	
EFSM ²⁾	22.5	2.9
EFSF ³⁾	17.7	3.1
Bilateral Loans ⁴⁾	4.8	
총외부조달액	67.5	
아일랜드 자체 조달액 ⁵⁾	17.5	NA
구제금융 총액	85	

주 : 1) 기존 5.8%에서 인하

2)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 EU 공동체 기금에서 부담

3)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유럽재정안정기금,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부담

4) 영국(EUR 3.8b), 스웨덴(EUR 0.6b), 덴마크(EUR 0.4b)

5) 현금(EUR 7.5b), 나머지는 연금펀드에서 조달

자료: OECD(2011)

□ 2010년 12월, 재정지출감소(100억 유로) 및 세금인상(50억 유로)을 골자로 하는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이 아일랜드 의회를 통과하여 강도 높은 긴축 재정에 들어감

— 향후 4년간 재정지출을 20% 감축하여 2014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함

- 총 100억 규모의 재정지출감소 방안으로는 정부운영비용에서 70억 유로, 자본지출에서 30억 유로를 감축
- 총 50억 규모의 세수확대를 위해 세금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세수기반을 확대

<표 III-9>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감축안

재정지출감소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예산 축소(28억 유로) · 공무원 24,750명 감원(12억 유로) · 신규공무원 임금 10% 삭감 · 최저임금 삭감(시간당 8.65유로→7.65유로) · 공공부문 연금 납부액 조정(7억유로 절감)
세수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구조를 2005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19억 유로의 소득세수입 증액 · 점차적으로 소비세 인상(현행 21%→2013년 22%→2014년 23%)으로 0.62억 유로 증액 · 2013년이후 부동산세 도입 · 토지가격세 신설(5.3억 유로 증액) · 자본합병세 및 자본이득세 조정(0.14억 유로 증액)

자료: 강유택 외(2010)

<표 III-10> 아일랜드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민계정					
GDP	5.6	-3.5	-7.6	-0.1	0.6
국내소비	5.4	-5.1	-13.9	-5.6	-3.5
민간부문소비	6.4	-1.5	-7.0	-1.2	-1.6
정부부문소비	6.9	2.2	-4.4	-2.2	-4.4
총고정투자	2.8	-14.3	-31.0	-27.8	-13.5
순수출(성장공헌정도)	0.8	1.5	3.8	3.4	3.5
총저축(GDP 대비)	21.7	16.4	11.5	10.6	12.2
민간	18.6	24.2	33.3	30.6	30.5
정부	2.7	-7.8	-21.8	-20.0	-18.3
총투자(GDP 대비)	27.3	22.3	14.1	11.8	10.8
민간	22.5	16.8	9.9	7.0	7.9
정부	4.8	5.5	4.2	3.8	2.9
물가, 임금, 고용					
CPI(연평균)	2.9	3.1	-1.7	-1.6	1.0
평균임금(전산업)	5.2	3.5	-1.0	-2.2	-1.2
고용	3.6	-1.1	-8.1	-4.2	-1.4
실업률	4.6	6.3	11.8	13.6	14.5
금융시장					
은행간시장 금리(3개월)	4.6	3.0	0.6	0.9	
국채금리(10년)	4.5	4.4	4.9	9.2	
ISEQ 지수	-26.3	-66.2	27.0	-3.0	
주택가격지수(ESRI)	-6.9	-8.8	-18.5	-10.8	
재정(GDP대비)					
통합재정수지	0.1	-7.3	-14.3	-32.4	-10.6
기초재정수지	0.9	-6.3	-12.2	-29.2	-6.7
통합정부부채	25.0	44.4	65.5	96.2	111.1
국제수지·무역					
국제수지(GDP 대비)	9.9	9.0	15.0	18.6	21.0
경상수지(GDP 대비)	-5.3	-5.6	-3.0	-0.7	0.5
실효환율(1999년 1분기=100, 연평균)					
명목	107.2	112.0	113.1	108.4	
실질	119.2	123.8	121.9	112.5	
* 일인당 GDP (유로)	43,645	40,702	35,801	34,433	34,969

주 : 1) 항목 뒤 괄호안에 다른 설명이 없으면 연평균치 전년 대비 증감률(%)

2) 2011년 지표는 IMF 예측치

자료: IMF(2011.05)

나. 더블린 IFSC 형성 배경 및 특화 전략

- 아일랜드는 1987년 금융특구인 더블린 IFSC 개발을 통해 금융서비스업 관련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
 - 70~80년대를 거치며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FDI를 통한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
 - 특히 아일랜드는 금융서비스업 관련 FDI 유치를 통해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실현하여,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한 성공적인 발전사례로서 금융중심지 추진국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었음
 - 적극적인 FDI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FDI 유입액의 약 1/3이 IFSC 내 자회사로 투자되는 외국 금융기업의 자본²⁶⁾

- 아일랜드는 금융지구 개발 당시 IFSC 설립 제 1 목표를 청년실업해소로 정하고, 단시간 내 대졸 무경험자의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후선업무(back-office activity) 중심의 유치 전략을 채택
 - IFSC는 설립 이후 20,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수요를 창출(2008년 기준)
 - 후선업무 관련 산업으로는 펀드서비스, corporate treasury, corporate banking 등이 있음

26) 2001년 IFSC 입주 기업의 FDI 총액은 58억 유로에 달함

- 아일랜드는 IFSC를 통해 유럽의 역외금융센터로 입지를 굳혔으나 주요 업무가 글로벌 금융회사의 후선업무 처리에 머무는 등 저비용 후선업무센터로서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 아일랜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FDI 유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졸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집중적으로 육성
 - 실제로 후선업무 중심인 IFSC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이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지속성이 낮음
 -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 전체의 고용 증대를 위해 단순 업무와 관련된 인력 교육개발에만 집중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소홀
 - 이로 인해 더블린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수준 높은 프론트 업무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글로벌 금융회사의 후선업무 아웃소싱 센터로서만 명맥을 유지
 - 또한, 동유럽, 아시아의 신흥 후선업무형 금융중심지 추진도시들이 약진하면서, 저비용 센터로서 더블린의 장점이 점차 퇴색

- 한편 IFSC 개발과 함께 회계 및 법률 서비스 시장이 동반 성장하면서, 더블린은 특히 하이테크 사무수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헤지펀드 등 펀드사무수탁서비스 중심지로서 새로운 기반을 마련²⁷⁾
 - 더블린은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 및 법적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 내에서 가장 다양한 펀드서비스 업무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제공 가능
 - 이는 금융 IT 전문가, 금융서비스 전문 로펌, 컨설팅펌, 회계법인 등이 밀집하고 있다는 클러스터 장점에 기인하고 있음

27) hedgeweek(2006)

- 특히 헤지펀드 관련 사무수탁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로 더블린 사무수탁 분야의 특화 분야로 적합

□ 더블린은 헤지펀드 중심의 니치(niche) 금융센터로 급속히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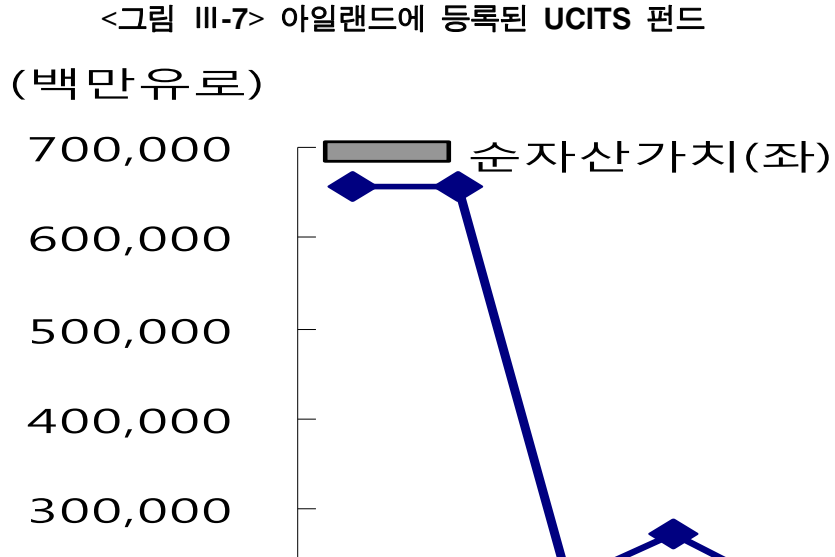
- 아일랜드는 법구조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UCITS Directive²⁸⁾ 가입으로 룩셈부르크에 이은 유럽의 펀드등록 및 사무수탁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
- 또한 2001년 12월에는 UCITS의 투자제한을 완화한 금융상품지침(Product Directive)이 채택되면서 헤지펀드 투자가 확대되었고, 이들의 아일랜드 진출이 확대
- 더블린 사무수탁의 전문성은 특히 다양한 비정형화된 금융상품 및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감사업무, 준법감시 업무 등 헤지펀드 관련 사무수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금융위기 이전 더블린은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관련 사무수탁 서비스 센터로 평가되기도 하였음

- 2009년 6월 기준 전세계 헤지펀드서비스업무의 49% 가량이 더블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²⁹⁾

28)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는 유럽 펀드 시장의 단일화를 위해 1985년 EC가 제정한 펀드에 관한 지침으로, 유럽연합 내 한 국가에서 승인된 펀드는 전체 유럽연합에서 판매될 수 있음. 룩셈부르크가 최초로 도입

29) 아일랜드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참조(www.irishfunds.ie)



자료: Irish Funds Industry Association

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블린 IFSC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업 의존도가 높은 아일랜드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 금융중심지 간의 중계센터 역할을 하는 더블린 IFSC에 큰 타격을 초래
 - 설립 초기 아일랜드 경제 성장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 IFSC는 입주기업의 주요 업무가 런던 및 뉴욕의 미들 및 백오피스 업무로 옮겨가면서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관성이 더욱 커짐
 - 글로벌 금융위기는 IFSC 입주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해당 기업 본사의 유동성 악화가 아일랜드 법인에 영향을 주어 국내경제로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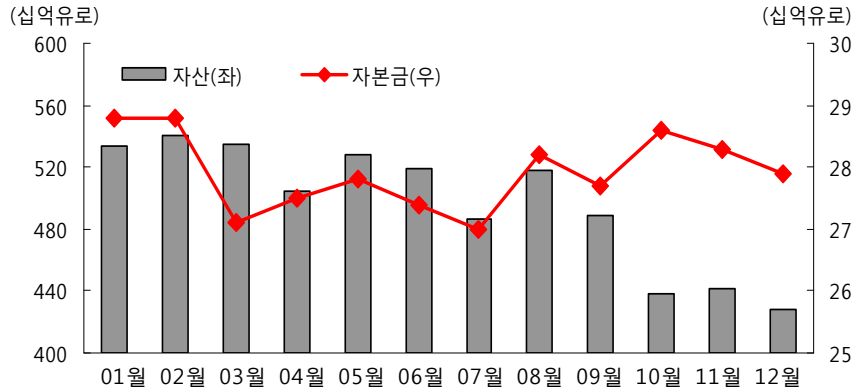
□ IFSC 입주기업의 주요 업무인 펀드서비스 분야는 위기 이후 심각한 타격을 받음

- 달러약세 및 펀드가치하락으로 펀드서비스 제공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여 IFSC에 입주한 관련 업체들의 수익도 동반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 헤지펀드 자산의 약 1/3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펀드 순자산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연동되어 있는 헤지펀드서비스기업의 수익 또한 크게 감소
- 위기 이후에도 각국의 금융관련 규제 강화로 헤지펀드 운영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펀드서비스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 IFSC 내 입주 은행 또한 자산의 1/4이상이 감소하는 등 타격이 심각

-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
- IFSC내 입주 은행(non clearing foreign bank) 총자산의 30% 이상을 국내 은행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은행의 부실화가 IFSC내 은행 전체에 영향
- 그러나 빠른 속도로 감소하던 IFSC 내 입주 은행의 자산은 정부의 부실자산 정리로 인하여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그 정도가 줄어들고 있음

<그림 III-8> 금융위기 후 IFSC내 입주 은행 자산 및 자본금 규모 추이(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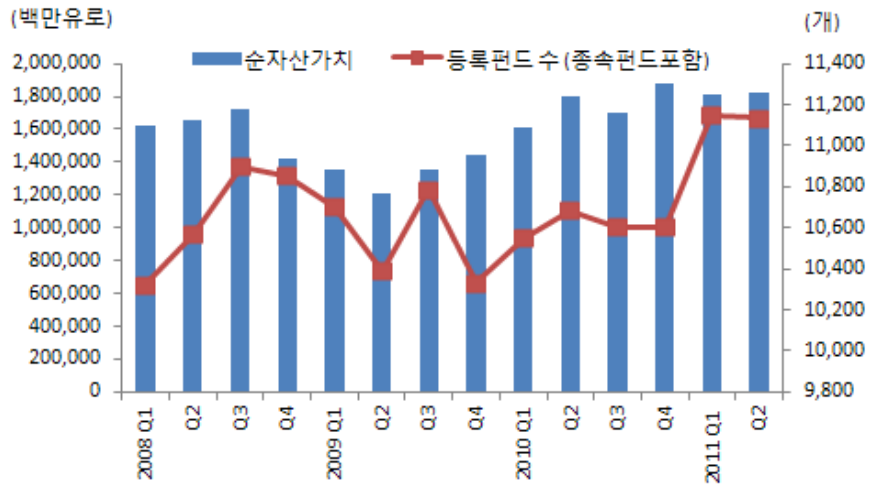
자료: The Finance Dublin Yearbook

- 대형 은행들의 파산 및 경영악화는 항공금융(Aviation Financing)의 침체로 연결되면서 항공금융업의 중심지인 더블린 IFSC 불경기를 확대
 - 항공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대표적 기관인 RBS, GEcas, AIG 등 글로벌 대형은행의 더블린 법인은 은행 자체의 부실화로 관련 대출을 축소

- 또한 금융위기로 2008년 전세계 증권발행 수가 전년대비 79%에 불과하여 유럽 내 증권발행의 중심지인 더블린 IFSC의 수익도 함께 감소

-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펀드산업 전체가 축소되어, 유럽 내 주요 펀드등록중심지인 더블린 IFSC의 수익성 악화에 일조
 - ISE(Irish Stock Exchange)에 상장된 펀드의 자산가치는 20% 하락하였으며 새로 상장되는 펀드 수 또한 감소
 - 2009년 1분기에는 12개의 펀드만이 새로 상장(2007년 동기 102개)

<그림 III-9> 금융위기 후 아일랜드 펀드 등록 현황



자료: Irish Funds Industry Association

- 보험업 역시 보험 계약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보험 및 캡티브 보험(captive insurance)³⁰⁾을 중심으로 성장세 유지
 - 생명보험사인 Oney Life, Allianz Global Life가 더블린을 기점으로 아일랜드의 연금보험을 EU 역내 국가에서 판매할 계획을 발표함
 - Aviva Life Re, Beazley Re 등의 재보험사들도 더블린을 기점으로 EU 역내 영업을 강화할 계획
 -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더블린에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하는 기업 수는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I-11> 운용사별 캡티브보험사 수

	2007	2008	2009
AIG	9	7	12
Allied Risk Mgmt.	14	12	15
Aon	78	66	67
Eurco	2	2	2
Eureko	9	6	7
Marsh	71	71	69
Self/other	5	10	9
Sogecore	n/a	n/a	1
Willis	19	19	20
합계	207	193	202

자료: Finance Dublin 2009

30) 캡티브보험이란 보험 외의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는 대체 위험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 ART)의 한 형태로, 자신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회사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모기업은 캡티브보험 자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해당 캡티브보험사는 자사의 위험담보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험사에 위험을 전가함, 이석호(2010)

- 아일랜드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IFSC의 수익 감소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짐
 - 낮은 법인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FSC는 아일랜드 전체 법인세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수익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법인세의 17%³¹⁾를 차지
 - 2008년, IFSC 기업들의 총수익은 68억유로이며, 8.5억유로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에 불과
 - 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경제 회복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법인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경우 IFSC 입주기업의 이전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더블린은 이미 사무실 임대료, 임금 등 운용비용이 너무 높아져 낮은 법인세마저 없어질 경우 금융센터로서 중요한 비용측면의 매력을 잃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블린은 금융경쟁력 지수인 GFCI에서 큰 하락을 보이는 등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큰 폭으로 감소
 - 이는 금융위기로 금융산업 자체의 위축보다는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민감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³²⁾

31) 2006년 12억 유로에서 2008년 8.5억 유로로 감소, The Irish Times(June 8, 2009)

32) Dublin City Council(2010)

<표 III-12> 더블린의 GFCI 경쟁력 추이

GFCI	순위	점수(총점 1000)
GFCI 1(2007.03)	22	579
GFCI 2(2007.09)	15	605
GFCI 3(2008.03)	13	613
GFCI 4(2008.09)	13	622
GFCI 5(2009.03)	10	618
GFCI 6(2009.09)	23	613
GFCI 7(2010.03)	31	612
GFCI 8(2010.09)	29	605
GFCI 9(2011.03)	33	592
GFCI 10(2011.09)	43	614

- 예전과 같은 위상은 떨어졌으나, 여전히 런던, 뉴욕 등 주요 금융중심지의 금융중사자들은 더블린이 유럽의 금융 도시들을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런던 및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금융사들의 미들 및 백오피스 기능이 오래전부터 더블린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더블린은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
 - 아일랜드 내부 경기침체는 더블린을 거점으로 국제적 영업을 하는 자산운용사들과는 무관하며, 금융위기 이후 뮤추얼펀드 세일즈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는 등 IFSC 입주기업의 회복세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³³⁾
 - 특히 더블린은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부분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현재 더블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단시일 내에 다른 도시로 옮겨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33) Financial Times(July 21 2008)

- 또한 아시아 및 중동의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성장으로 전체 펀드 운용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UCITS IV directive가 시행으로 펀드 투자대상이 더욱 다양화되어 수요를 기반으로 한 펀드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펀드서비스센터로서의 더블린 IFSC의 위상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후선업무와 함께 리스크관리 등의 미들오피스 업무가 통합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블린은 단순한 저비용 후선업무센터의 역량을 넘어 미들·후선 혼합형 특화센터를 이룩하고 있음
 - 더블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또한 업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단순한 저임금과 IT 기술만을 내세우는 신흥 센터와의 경쟁에 있어 당분간 더블린의 상대적 우위가 예상됨
 - 또한 경기침체는 고용비용 및 오피스 임대료 등의 감소를 가져와 경기조정 요소들의 영향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효과를 확대
 - 특히 2006년 전후, IFSC/Dockland 지역에 오피스 신축 공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빈사무실이 크게 증가하여 임대료가 하락³⁴⁾

34) The Irish Times, 2008(June 11)

<표 III-13> 아일랜드 국제금융서비스 업무 관련 종사자 수

	2006	2007	2008	
				전년대비 증감
펀드산업	9,227	10,599	10,651	52(0.5%)
은행업	10,902	11,191	10,729	-462(-4.1%)
보험업	3,027	3,268	3,526	256(7.9%)
합계	23,156	25,058	24,906	-152(-0.6%)

자료: Finance Dublin Yearbook 2009

□ 아일랜드 정부는 IFSC가 아일랜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실화된 국내 은행을 조기 정리하고 금융감독체제를 정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 더블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홍보대사 및 관련기관 설립을 계획하는 등 국내·외에 IFSC 홍보를 강화할 예정
- 더블린시는 GFCI를 발간하는 Z/Yen group에 의뢰하여 더블린의 금융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받는 등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재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 Z/Yen의 보고서³⁵⁾에 따르면 런던 등 글로벌금융센터의 업계 종사자들은 더블린이 금융센터로서 가진 기존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극 홍보해야 함을 강조
 - 또한 더블린을 더 이상 중계센터가 아닌 특정분야(자산운용 혹은 보험 등)의 중심센터로 포지셔닝을 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고 조언

35) Dublin City Council(2010)

<표 III-14> 더블린 IFSC SWOTs 분석

<p>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펀드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입 장벽을 높임 · 아일랜드 정부의 탄력적인 법체계 및 조세혜택
<p>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펀드서비스 중심의 센터로 대외경제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음
<p>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뉴욕 등으로 떠난 더블린의 금융전문인력을 불러들여 펀드운용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 국내 경기 침체로 임금 및 임대료가 낮아져 후발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우위 · 경제위기에도 펀드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영향을 덜 받으며 성장세를 지속
<p>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고객인 헤지펀드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운영규모 축소가 예상 · 아일랜드 경제 위기로 정부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 · 아일랜드의 금융업 규제 강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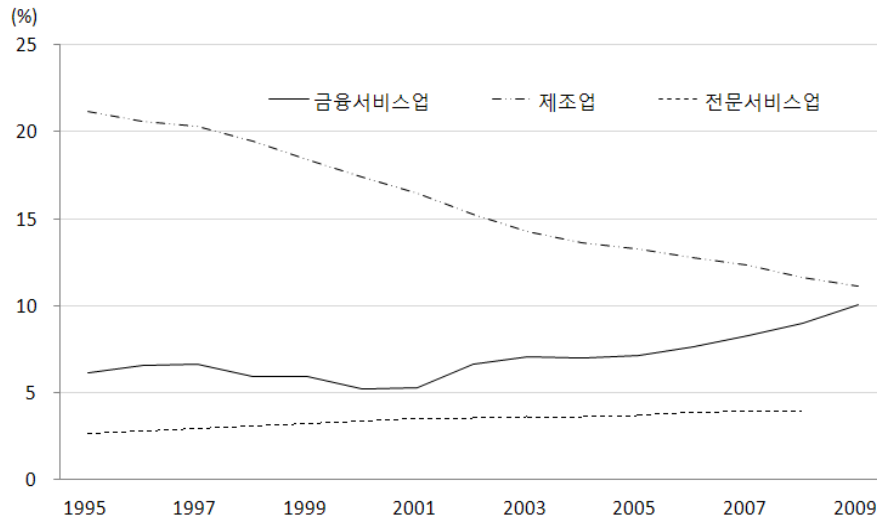
4. 영국

가. 영국 금융산업 일반현황

- 영국 전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09년말 기준)이며, 1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2010년말 기준)
 - 영국 금융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미국 8.4%, 일본 5.8% 등에 비해서 높은 수치로 프랑스나 독일도 각각 5.1%, 4.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2009년말 기준)

- 금융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회계·법률·경영컨설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 분야까지 합산하면 금융산업의 GDP대비 비중은 약 13.9%에 달함
- 금융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101,833파운드로 영국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으며, 영국 세수의 11.2%를 차지

<그림 III-10> 영국 GDP 구성 추이



자료: IFSL(2011)

<표 III-15> 영국 금융산업의 지역별 고용과 생산성

	고용인구 ¹⁾ (천명)	금융산업 고용 대비비중(%) ²⁾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³⁾
London	352	31.9	151,734
South East	126	11.4	88,568
North West	94	8.5	74,607
Scotland	95	8.6	86,745
Yorks & Humber	84	7.6	71,409
South West	78	7.1	81,034
East England	72	6.5	89,738
W. Midlands	76	6.9	73,056
E. Midlands	48	4.4	82,267
Wales	29	2.6	69,848
N. East	28	2.5	81,296
N.Ireland	21	1.9	64,636
영국 금융산업	1,103	100.0	101,833
영국 전체산업	28,921		42,200

주 : 1) 2010년 9월 기준, 2) 2010년말 기준, 3) 2008년말 기준
 자료: IFSL(2011)

□ 영국 금융시장은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에 있어 시장규모 면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3월 현재 영업 중인 318개의 은행 중 외국계 은행은 241개이며 은행예금 규모는 2007년 말 6.1조 달러로 미국(8.5조 달러)에 이어 2위임
- 2009년 중 영국의 보험시장 규모(수입보험료 기준)는 3,090억 달러로 미국(1조 1,400억 달러), 일본(5,06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
- 2010년 말 현재 세계 시가총액은 55조 달러이며 영국은 이중 7%를 차지하여 미국(31%)의 뒤를 이어 일본(7%)과 세계 2위 그룹을 형성

- 2010년 4월 현재 세계 외환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3조 달러이며 이중 런던시장이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이 17%,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6%를 차지

나. 런던의 금융중심지 발전과정

-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는 제1차·2차 세계대전 및 1930년대 대공황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소위 '빅뱅'으로 불리는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회복
 - 외환자유화(1979): 국제간 외환거래 허가제도 폐지
 - 증시자유화(1986): 빅뱅을 통해 증권시장 대변혁
 - 증권거래소 회원사(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100%자본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미국 매릴린치(Merrill Lynch), 일본 노무라(Nomura) 등 외국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의 자본 참여 급증
 - 중개수수료 자유화, 증권거래소 객장 거래제도의 전자식 거래제도로의 전환 등 규제완화·선진화로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으로서의 런던의 지위 강화
 - 금융산업을 단순한 기업자금조달이나 재원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창구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킴
 - 이를 위하여 법률·세제·회계·전산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영위하는데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교육·문화 정책의 목표를 둠

- 런던 동북단에 위치한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에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증권·외환거래소를 비롯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음
 - 일반 지방자치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런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도 수행
 - 지방자치업무: 여타 지방정부처럼 교육, 주택, 환경정화, 사회서비스, 도시계획 등 업무
 - 기타 업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
 - 행정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을 감안, 중앙정부시설관리, 중앙행정기구(경찰·법원) 지원, 런던인프라(공항·교량) 시설 관리 및 지원, 런던 외 지역 지원
 - 시장(Lord mayor)은 시의원 중 1인이 1년 임기로 임명되며 영국의 금융시장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의 국내외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런던 내지 영국의 금융중심지에 대한 대외홍보 및 협력 업무를 담당
 - 이를 위해 시티오브런던에서는 연간 12회, 총 18~20개국을 방문하여 시티오브런던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인도·러시아·중동·미국 5개국은 매년 방문

- 템즈강변 하류에 위치한 카나리워프(Canary Wharf)는 카나리워프(Canary Wharf)그룹 빌딩과 시티·HSBC·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밀집한 금융 및 상업 중심지역
 - 도크랜드(Dockland) 지역의 아이슬 오브 도그(Isle of Dogs) 중앙부에 위치한 약 9만평 부지로 198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시티오브런던과 금융중심지의 지위를 두고 경쟁관계

- 런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랜 기간 세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국제금융도시로서 ① 선진금융제도와 인프라, ②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고급 인력, ③ 정치적 안정성, ④ 과거 영어권 국가들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강점을 가진 것에서 비롯됨
 - 런던은 중심지에 세계 유수의 법률, 회계, 컨설팅 기업들이 집중해 있어 규모의 경제달성 및 비용절감이 가능
 - 런던은 회계, 법률, 금융교육, IT 등 금융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법률시장도 완전 개방되어 세계 7대 법무법인 중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5개에 달함
 - 편리한 통신망과 교통, 안정된 정치환경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각종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은 런던의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소가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 런던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및 생활영위가 용이하며 미국과 아시아지역의 중간 시간대로 국제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

□ 그러나 높은 임대료 및 생활비, 세율, 금융 관련 인력의 공급 부족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0년 말 기준 런던의 임대료 수준은 시드니의 2배, 뉴욕(Midtown)의 2배, 도쿄의 1.3배, 싱가포르의 1.8배에 달함
- 2008년 4월에 이루어진 금융중심지 육성에 배치되는 세재개편은 금융중심지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영국의 경우 부동산, 주식양도 차익 등 일정액 이상의 자본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누진과세하고 하고, 장기 보유 시 감면제도 운영 및 사모펀드 등의 경우에도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100만 파운드 이하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10%, 그 이상에 대해서는 18% 단일과세
 - 영국거주 외국인 부과금(Non-Domicile Charge): 최근 10년 중 7년 이상 영국에 거주하고, 영구주소를 해외에 둔, 외국인거주자(Non-Domicile Residents)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년 3만 파운드의 분담금을 부과
 - 세계은행(World Bank) 사업환경조사(Ease of Doing Business)³⁶⁾의 세제분야(Ease of Paying Taxes Rankings)에서 런던은 2011년 12위를 차지함(싱가포르 4위, 홍콩 3위)
- 금융 관련 분야는 회계, 수학, 물리학, 금융공학 등으로, 이들 분야의 전공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36) 각 국가의 기업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10개 주제항목에 대해 발표

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영국의 금융중심지 전략

- 영국경제는 2007년 9월 노던록(Northern Rock)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조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2008년 3/4분기에 전기 대비 -0.7%성장한데 이어 4/4 분기에도 전기 대비 -1.6% 성장하는 등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2007년 6월말 현재 총자산 1,135억 파운드(약 230조원)인 노던록의 예금인출 사태는 영국 재무부가 예금전액보호 및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진정
 - 이는 영국에서 1866년 이후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뱅크런 사태
 - 이후 2008년 2월 재무부는 노던록이 경영정상화 될때까지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결정
 - 후속조치로 영국 정부는 금융감독청(FSA) 및 영란은행의 기능강화,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 그러나 노던록사태의 여파는 투자자의 금융주 공매도로 이어졌고,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위협받자 정부는 부분적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함
 - 브래드퍼드(Bradford)와 빙글리(Bingley)는 완전 국유화되었고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HBOS, 로이즈TSB(Lloyds TSB)는 정부가 일정 지분 보유
 - 이후 합병된 HBOS와 로이즈TSB(Lloyds TSB)에 대한 정부 지분은 43%까지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성향 강화로 인해 신용경색문제가 본격적으로 심화
 -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4/4분기에 1999년 이래 최고치인 6%를 넘어섬
 - 금융산업의 고용 현황은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9월 현재 약 백만명으로 전년대비 16,000명 정도가 감소
 - 2008년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영국의 주가지수(FTSE100)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급락(2008년 연중최고치 대비 약 42%하락)
 - 주가지수 6,479.4(2008년 1월 3일)→3,781.0(2008년 11월 21일)
 -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런던증권거래소의 전체 시가총액은 2008년 말 약 1조 9천억 달러로 전년도(3조 9천억달러)의 49% 수준으로 감소

-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산상각은 2008년 최고조를 이루었으며,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의 본격화로 인해 과도한 금융산업 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
 -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기관의 자산상각은 2008년 4분기에 최고치인 144억달러³⁷⁾를 기록
 - 이로 인해 2008년 2분기부터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구제금융조치가 시행되었으며, 2009년 2분기까지 누적금액이 1,300억 달러³⁸⁾에 달함

37) 대규모 자산상각과 자본조달이 발표된 4개의 금융사(HSBC, Hbos plc, Royal Bank of Scotland, Barclays)를 대상으로 합산된 금액임

38) 위와 동일

- 2008년 주요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폭락
 - RBS(Royal Bank of Scotland)는 2008년 241억 파운드의 적자를 보고하였으며 HBOS³⁹⁾도 75억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
 - 부동산 버블 붕괴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되면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에서 부실자산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실물 경제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부각
- 이후 영국은 금융규제의 대원칙으로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최소규제원칙(Light Touch Regulation)'⁴⁰⁾을 폐지
- 영국은 1986년 금융빅뱅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전까지 최소규제원칙을 고수해왔으나 금융규제시스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폐지
 - 규제완화를 선도해온 영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과거 최소규제원칙을 주창함에 따라 세계각국도 이를 따라 추진해 왔음
- 2009년 3월에는 금융감독청(FSA)이 터너리포트(Turner Report)를 발표하여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 보고서에서는 개별 금융기관감독보다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시건전성 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감독방식에 대한 획기적 변화·위험성 높은 거래에 대한 자본금 적립 확대·유동성 규제 등의 감독 강화를 주장
-
- 39) Lloyds Banking Group의 모기지대출 자회사
40) 당국은 큰 원칙만 정하고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자율에 맡기는 규제방식

- 이후 2009년 5월 영국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의 요청에 의해 민관 공동으로 런던의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 유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 “영국 금융서비스산업의 미래(UK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 the future)”⁴¹⁾를 발간
- 금융산업의 경제 공헌도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 제안을 제안
 - 현재 진행 중인 EU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 강조
 - 경쟁력 있는 과세 체계와 금융인력 양성 방안의 논의

41)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참고

IV. 금융중심지 전략 추진시 고려사항

1. 조세경쟁력 제고
2. 성공적인 금융클러스터 조성
3.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자산운용업 발전 전략
4. 신성장 전략의 채택

IV. 금융중심지 전략 추진시 고려사항

1. 조세경쟁력 제고

가. 각국별 세제혜택 현황

1)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과 함께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 특히 IFSC 특별지구 개발 당시 외국 금융기관의 아일랜드 유치를 위해 비조세 요인과 함께 조세정책적 요인을 제시하였음

<표 IV-1> 더블린 금융중심지 발전에 기여한 조세정책적 요인

법인세율
- 표준 법인세율이 12.5%(유럽 최저 수준)
- IFSC에 입주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특별 세율인 10%를 적용 ¹⁾
금융소득 관련 조세혜택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제외 해당 대상은 a) 아일랜드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유럽연합 국가의 거주자 b) 그 지배를 받는 경우 c) 유럽연합 또는 조약체결 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배당
- 비과세 외자법인(외국인 지분 90%이상) 및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해 특정 정부채권 이자 비과세

<표 IV-1> 더블린 금융중심지 발전에 기여한 조세정책적 요인(계속)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아일랜드 법인세법: 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 유럽연합령: 유럽연합의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경우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
 -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면세
외자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제3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자회사
주식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 면제
-

주 : 1) IFSC 특별세법은 2005년 12월 31일 종료, 2006년 이후 IFSC내 기업의 거래 수입에 대해서는 12.5%, 거래외수입은 passive income으로 분류되어 25%가
부과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7)

□ 역내 국가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법인세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

- 1981년, 특정 개발지역 및 제조업체 등에 법인세율을 기존 47%에서 10%로 인하
- 적용대상은 아일랜드에서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 IFSC 입주기업, Shannon Free Zone 입주기업 등임

<표 IV-2>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12.5%	표준 법인세율은 12.5%(s 21)
25%	다음 형태의 소득(s 2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 국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Case III 소득) · 특허권, 잡이익(Case IV 소득) · 임대소득(Case V 소득) · 광업, 석유사업, 토지개발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20%	주거·토지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s 644B)
10%	다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분야 외자기업 ·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세제감면 혜택을 승인받은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분야 외자기업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7)

- 또한 외국법인 및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비거주자에게 금융소득 관련 과세에 대해 일정부분 혹은 전체 면제 혜택을 제공42)
 - (이자소득세) 아일랜드는 비거주자의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지분을 90% 이상) 및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게 특정 정부 채권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줌
 - (자본이득세) 2000년 4월 1일 이후 아일랜드는 비거주자에게 주식 및 뮤추얼펀드43) 처분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44)
 - 비거주자인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 및 주식의 처분 후 발생하는 자본이득세 면제45)

42) 한국조세연구원(2007) 참고

43) 뮤추얼 펀드는 authorized unit trusts; variable or fixed capital investment companie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s; common contractual funds(CCF); UCITS 등을 포함. International funds and fund management survey, wwwkpmg.com

44) International funds and fund management survey, wwwkpmg.com

- 아일랜드 거주자 및 아일랜드인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 받은 펀드 및株式이 아닐 경우 비거주자 투자자는 증여세 및 상속세 의무 없음

— (배당소득세) 아일랜드는 비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함

- 아일랜드와 이중과세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EU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그 법인 혹은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 적용함

□ 그러나 낮은 법인세율은 EU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방지대책을 야기하여, 1999년 아일랜드 정부와 EU 집행위의 합의하에 새로운 법인세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국내외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표준 법인세율인 12.5%를 적용

— EU 가입국인 아일랜드는 자국내 실업문제로 인해 한시적으로 역외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경제회복과 함께 특혜 조항이 소멸

—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 표준 법인세율을 12.5%(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⁴⁶⁾

— 기존 10% 법인세를 적용받던 기업⁴⁷⁾들은 2010년 까지 특별세율인 10% 적용, 이후는 일괄적으로 12.5% 적용

45) 비거주자가 아일랜드 내의 토지, 아일랜드 내의 광물 또는 광물채취권, 아일랜드 내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영업에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한국조세연구원(2007)

46) 47%(1981)→43%(1991)→40%(1993)→36%(1997)→32%(1998)→28%(1999)→24%(2000)→20%(2001)→16%(2002)

47)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세계감면혜택을 승인 받았거나 이미 설립된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 분야의 외국투자 기업이 여기에 해당

<표 IV-3> 주요 금융중심지 각국이 적용받는 국제기구 조세관련 규제조항

호주	OECD, WTO
아일랜드	EU, EFTA, OECD, WTO
영국	EU, OECD, WTO
싱가포르	Commonwealth, ASEAN, WTO
한국	OECD, WTO

- 각종 특혜세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표 IV-4> 주요 금융중심지 법인세율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호주	30.0	30.0	30.0	30.0	30.0
아일랜드	12.5	12.5	12.5	12.5	12.5
한국	27.5 ¹⁾	27.5	27.5	27.5	24.2 ²⁾
영국	30.0	30.0	30.0	28.0	28.0
싱가포르	20.0	20.0	20.0	18.0	18.0 ³⁾

주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만 법인세 과세
 1) 중앙정부 25%, 지방정부 2.5%, 2) 중앙정부 22%, 지방정부 2.2%, 3) 2010년 이후 17%

자료: OECD Statistics Portal,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Deloitte

2) 싱가포르

- 외국기업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낮은 법인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에 안간힘을 쏟자 싱가포르는 2010년 이후 기존 18%에서 17%로 인하⁴⁸⁾

<표 IV-5>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 비교

호주	30.0	일본 ¹⁾	39.54
중국	25.0	말레이시아	25.0
홍콩	16.5	싱가포르	18.0
한국 ²⁾	24.2	대만 ³⁾	25.0

주: 1) 중앙정부(adjusted) 27.98%와 지방정부의 11.56%의 합(2008)

2) 중앙정부 22.0%, 지방정부 2.2%

3) 최고세율, 소득에 따라 0~25%로 차등 부과

□ 낮은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산업군 및 기업의 특징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감면의 혜택이 주어짐

— 2002년에는 금융중심지 육성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얻은 역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세 적용 등 대폭적인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함

48) 부분적인 세금면제(Partial Tax Exemption) 규정으로 실제 유효세율은 이보다 낮음, 한국조세연구원(2007)

<표 IV-6>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율감면 규정

항목	조세지원 내용
ACU ¹⁾	일반적인 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10%(대규모 거래: 5%)의 세율이 적용됨
증권회사	승인받은 증권회사(Approved Securities Company, 이하 ASC)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대규모 증권의 매매·인수·관리 또는 사모를 통해 얻은 요건을 충족하는 증분소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5%의 세율이 적용되며, 감면기간의 연장도 가능함
펀드매니저	승인받은 펀드매니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역외펀드 및 비(非)싱가포르 자산펀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수료(외국인투자자와 다른 ACU·ASC·비거주자 간에 외국증권의 대여·대출 알선업무를 제공하고 얻은 수수료 포함)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5백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가 얻은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됨
보험·재보험 회사	보험회사가 역외생명보험사업 ²⁾ , 역외리스크 ³⁾ 의 보험·재보험사업에서 얻은 소득(할증금·배당·이자 이외의 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10%의 세율이 적용됨
파생상품 (commodity) 트레이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선물회원이 승인받은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금융기관의 ACU 등과 금과·상품·금융선물(원유선물 포함)을 거래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금융 및 자금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받은 싱가포르 국외의 자회사·관계회사·사무소·제휴회사를 위해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얻은 특정 소득(싱가포르 원천 이자·배당소득제외), 승인받은 해외투자에서 얻은 배당소득으로 승인서한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됨. * 싱가포르 국외의 자회사·관계회사·사무소·제휴회사에 요건을 충족하는 FTC 서비스⁴⁾를 제공하고 얻은 순소득⁵⁾, 요건을 충족하는 FTC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한 자와의 거래에서 얻은 외화소득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10%의 세율이 적용됨
벤처캐피털	승인받은 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년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의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가능함
신용평가기관	일정한 요건 ⁶⁾ 을 충족하면 최초 5년 동안 10%의 세율이 적용됨

<표 IV-6>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율감면 규정(계속)

항목	조세지원 내용
신탁회사	승인받은 신탁회사 ⁷⁾ 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상품선물거래소의 회원	<p>상품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얻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됨</p> <p>* 싱가포르 상품거래소, 특정 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기관의 ACU, 싱가포르 상품거래소의 다른 회원, 싱가포르의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자, 거주자 기업의 싱가포르 국외 지점과의 상품선물거래 또는 특정 상품에 관한 외국환거래에서 얻은 거래이익 및 수수료</p> <p>* 싱가포르 상품거래소, 특정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행해지는 상품선물거래에서 얻은 이익으로 회사가 가진 예금에서 얻은 이자소득</p>

- 주 : 1) ACU(Asian Currency Unit, 이하 ACU)란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아시안달러의 수취 및 대출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말함. 아시안달러거래는 싱가포르 소재은행의 ACU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한 거래는 정부의 외환규제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거래 구분은 국내금융시장과 국제자본시장의 병행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함에 있음
- 2) 역외생명보험사업이란 보험증권의 발행일 현재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권의 소유자에게 직접·임의·특약생명보험증권에 따른 책임을 보험·재보험하는 업무를 말함. -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자 - 싱가포르에 주소가 없는 자
- 3) 역외리스크란 피보험자가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직접·임의보험, 총할증금을 고려했을 때 전체 위험의 75% 이상이 외국에 있는 특약보험(싱가포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외국 위험으로 간주한다)과 관련된 싱가포르 국외의 위험을 말함
- 4) 지역·국제적인 재정관리서비스 및 자금관리서비스, 네트워크 기업의 잉여자금 또는 싱가포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대출, 기업금융·자문서비스, 금융·경제·투자와 관련된 조사·분석, 대출통제·관리, 경영·관리·사업계획 등
- 5) FTC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수령자에 대해서는 MAS의 승인을 얻어야 함
- 6) 10년 이상 국제적인 신용평가실적, 싱가포르에서 2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분석가 고용, 싱가포르에서 매년 5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사업비용 지출
- 7) 신탁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 또는 싱가포르 국외에 설립된 비거주자 기업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신탁·보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7.11)

-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이중 소득공제가 가능
 - 파생상품 거래(주식·외환·이자율옵션 포함)
 - 증권화 및 구조화 상품 개발
 - 전자거래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 새로운 스왑 거래
 - 헤지 및 구조화 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 해외증권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을 포함한 해외 기업의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 유치할 경우, 소득세 면제·세율감면·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주요 업무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
 - 운영총괄본부가 얻은 경영수수료 및 기타 지역본부 관련 소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해 5~10년 동안 10% 세율 적용

- 세제혜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펀드운용 및 상품선물거래와 관련한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준비 중⁴⁹⁾

49) Singapore Budget 2009

나. 조세경쟁의 새로운 국면

- 금융위기 이후 조세회피형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음
 - 비록 조세회피 기회 제공이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킨 것은 아니나, 지나친 유동성 팽창 등을 야기해 금융위기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큼
 -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조세회피국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며, 싱가포르·네덜란드 등 비교적 금융규제의 정도가 투명한 국가에게도 조세의 형평성 및 비밀보장주의 등의 이유로 조세회피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지난 수십년간 국제금융시장은 개방과 통합의 방향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어온 반면, 조세관련 국제규범은 80여년 전에 형성된 “이중과세방지 조약”틀에서 정체
 - 이중과세방지 조약은 해외기업의 투자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거주 국가,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source)국가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비한 조세관련 국제적 규제를 통해 금융센터로서의 약진을 추구하는 일부 역외금융중심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 및 개인투자자들의 조세회피가 성행
 - 1970년 이후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개방과 통합으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조세차익을 위해 기업의 국적을 세율이 낮거나 혹은 없는 지역에 등록

— 또한 기업뿐 아니라 부유층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

□ 조세회피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 발발 이후 이들 조세회피형 금융중심지국가에 대한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질서 체계의 중심점이 된 G-20의 2차 정상회담(2009년 4월)에서 조세회피국에 대한 제재의 범위 및 조세협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러한 움직임에 조세회피국으로 지정받은 모든 국가들은 OECD의 조세협정에 동참할 것을 천명

<표 IV-7> OECD 국제조세기준의 원칙

-
1. 협정대상국의 예상가능한 관련정보(foreseeable relevance) 공개의 요구에 순응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
 2. 자국 조세관련 규정 및 비밀보장주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보공개를 제공
 3. 정보 수집 및 제공의 역량 보유의 의무
 4. 조세 대상자의 권리준수의 의무
 5.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 의무를 준수
-

- 특히 미국은 조세회피국 제재에 대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09년 상원의원 Levin과 Dorgan의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50개 국가를 조세회피국으로 지정
 - 미국의 조세회피국 지정은 OECD의 리스트보다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조세형평성 차원의 이슈에 대한 불합치 사항에 대해서도 조세회피행위로 간주⁵⁰⁾
 - Levin-Dorgan 리스트는 OECD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몇몇 국가까지도 불법 조세회피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조세관련 정합성 제고가 불가피
 - 대표적인 예가 아일랜드로, OECD 원칙 준수 차원을 넘어 국제적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음
 - 특히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조세회피방지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조세회피국 제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속적으로 보여줌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회피 방지를 위해 세법을 보완하고 향후 10년간 이들 기업의 조세징수를 통해 2,100억 달러의 세수증대를 유도할 예정

50) Levin-Dorgan 리스트는 OECD의 조세회피국 및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지정한 조세회피국 US 법정에서 지정한 국가들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 리스트로 구성됨

<표 IV-8> 조세회피국 리스트 해당여부 비교(일부국)

	OECD	NBER	Levin-Dorgan
안도라	✓	✓	✓
코스타리카			✓
홍콩		✓	✓
아일랜드		✓	✓
리히텐슈타인	✓	✓	✓
룩셈부르크		✓	✓
파나마	✓	✓	✓
싱가포르		✓	✓
스위스		✓	✓

자료: OECD, NBER,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on International Taxation

- 그동안 파격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중심지를 구축한 국가들은 향후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
 -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은 조세회피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움직임이 분명한지자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준비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모두 OECD 국제조세표준에 가입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미국의 조세회피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100% 협조하기로 밝힘

다. 한국의 조세경쟁력 현황 및 향후 전략 방향

-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일부 금융중심지형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역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서울의 금융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세시스템 효율성에서 아시아 13개 도시 중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공공부문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나타남
 - 서울은 법인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9> 조세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순위	도시	인덱스 (London=100)	순위	도시	인덱스 (London=100)
1	홍콩	108.7	8	시드니	79.6
2	싱가포르	106.3	9	동경	74.9
3	서울	97.9	10	마닐라	67.2
4	쿠알라룸푸르	92.3	11	베이징	33.1
5	방콕	85.0	11	상하이	33.1
6	타이페이	84.5	13	뭄바이	32.7
7	자카르타	80.8			

자료: 강형철 외(2007)

□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및 기타 세율을 합한 총 세율(total tax rate)의 경우 홍콩(28.76%), 싱가포르(28.81%)에 이어 서울이 30.9%를 기록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서 뉴욕(42.5%), 동경(40.9%)과 런던(30%)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의 경쟁국인 홍콩(17.5%)과 싱가포르(20%), 대만(25%)과 비교할 때에는 높은 수준임

<표 IV-10> 도시별 세율비교

순위	도시	총세율	순위	도시	법인세율
1	홍콩	28.76	1	홍콩	16.5
2	싱가포르	28.81	2	싱가포르	17.0
3	서울	30.91	3	타이페이	24.0
4	쿠알라룸푸르	35.16	4	서울	24.5
5	런던	35.38	5	쿠알라룸푸르	25.0
6	타이페이	35.84	6	런던	28.0
7	자카르타	37.21	6	방콕	28.0
8	방콕	40.17	6	자카르타	28.0
9	뉴욕	45.96	6	시드니	30.0
10	시드니	52.21	10	마닐라	30.0
11	동경	52.76	11	북경	25.0
12	마닐라	52.98	11	상하이	25.0
13	북경	77.07	13	뮌바이	33.99/42.23 ¹⁾
13	상하이	77.07	14	동경	41.0
15	뮌바이	81.06	15	뉴욕	39.5

주 : 법인세는 지방세를 포함한 유효법인세율로 2009년 기준, 총세율은 2007년 기준
 1) 외국법인

자료: Deloitte web, 강형철 외(2007)

- 그러나 홍콩, 싱가포르 등 조세혜택을 금융중심지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삼고 있는 일부 국가와의 경쟁력 열세는 분명히 존재
 - 금융위기 이후 조세의 부당 경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는 역내·외 차별세율 적용에 대한 비난을 역내 세율 인하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오고 있어, 사실상 종합 성장지향형인 한국이 제공할 수 없는 파격적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각종 조세혜택을 통해 단기간 내 금융중심지로 성장하였으나 금융산업에 치중한 발전전략은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위기 시 내성의 부재라는 약점이 여실히 드러남
- 또한 부당 조세 혜택을 제공하며 조세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들 대상 국가 모두를 조세회피국으로 지정하며 본격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오히려 OECD 회원국인 한국은 조세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조세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조세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G20의 조세관련 제재원칙 설정 이후 싱가포르 등 역외금융지역의 파격적인 조세 인센티브로부터의 부당 경쟁압력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인 경쟁력은 국제적인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금융섹터별 특화허브 유치 전략에 따라 부분적·한시적 조세혜택 제공을 통해 단기적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성공적인 금융클러스터 조성

-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중심지의 성공은 결국 클러스터의 성공을 의미하므로, 중앙정부는 자체의 클러스터 전략을 보다 면밀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클러스터의 개발은 종합금융지구 육성을 통해 완성되며, 이는 글로벌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거주, 사무, 레크레이션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금융지역으로 흔히 “국제금융센터”로 명명되는 지역을 지칭함
 - 대표적인 종합금융센터는 20여 년 전에 설립된 더블린의 IFSC로, 주거, 사무, 레크레이션 기능을 통합한 최초의 대규모 종합금융지구로서 더블린의 금융서비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 또한 이러한 클러스터의 개발은 최근 금융중심지 추진국가의 공통적인 특징
 - 호주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대대적인 금융지구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수년전 착공한 종합금융센터의 임대 계약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침

- 호주는 현재 시드니 서쪽 지역인 Barangaroo지구를 종합금융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Act 2009”을 제정
 -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증축 사업이 없어 공실률이 2007년 초 5.6%에서 2008년 초 3%까지 감소했으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Barangaroo 지구는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시드니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 따라 처음부터 런던의 Canary Wharf와 더블린의 Docklands 등에 필적할 국제 금융업무지구로 만들기 위해 개발에 착수
 - 사업 계획에 따르면 Barangaroo 내 22,000명의 상시 인구와 매년 1,200만 명의 방문자를 유치할 예정으로, 최대 508,300m²의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될 예정
 - 상업용 면적 398,000m², 주거용 면적 97,075m², 관광용 면적 50,000m², 그 외 소매유통(retail) 면적 39,000m² 등
- 싱가포르 또한 새로운 국제금융중심지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종합단지형 금융중심지(Marina Bay Financial Centre) 개발을 진행 중
- 32층/46층 두 개 동의 오피스 타워와 55층의 주거 및 상가 복합 타워로 구성된 Work · Living · Playing 혼합개념의 새로운 종합 단지가 2012년 완공 예정
 - 2010년 완공예정인 오피스타워 1동에는 Mcquarie, DBS, Standard Charterd Bank 등 주요금융회사들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오피스 렌트계약이 완료되었음
- 성공적인 금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성이 무엇보다 필수적 요소
- 대부분 성공사례의 경우 중앙정부가 금융지구의 개발 전권을 지방정부 또는 민간사업자에 위탁하고, 금융기관 등 관련산업 유치를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각종 지원책 등을 제공함

3.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자산운용업 발전 전략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자국 자산운용업 발전 및 국제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 절에서는 이를 소개하고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함
 - 퇴직연금제도는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민간 연금제도로 높은 소득대체율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제도 강화를 추진 중
 - 퇴직연금제도는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실증 연구들을 통해 입증⁵¹⁾

가. 호주의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및 현황

- 호주의 연금제도는 노령연금(Age Pension), 퇴직연금(Superannuation), 개인의 자발적 저축(voluntary savings)으로 이루어진 3층 구조의 형태로, 이중 노령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부 재정을 재원⁵²⁾으로 지급하는 연금
 - 연령조건·거주조건·자산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독신은 2주당 546.80호주달러, 부부는 2주당 각 1인 456.80호주달러를 지급(2008년 6월)

51) Walker and Lefort(2002), Impavido et al.(2003), Holzmann and Hinz(2005) 등

52) 노령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재정에서 충당되므로 별도의 목적세나 보험료는 없으며, 퇴직 후 소득이 불충분한 노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을 만큼 급여액도 인상됨

- 65세 이상 남성과 60세 이상 여성으로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고, 노령연금 청구 당시 호주에 거주해야 함
 - 주택을 포함한 총 자산규모가 161,500호주달러(약 1억 3천만원) 미만인 독신자와 229,000호주달러(약 1억 8천만원)미만인 부부에게는 기준 금액의 100%를 지급하며, 자산규모가 이로부터 1,000호주달러 증가 시 1.5호주달러를 삭감
- 현재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의 75%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나, 재정부담 증가로 향후 기준을 강화할 계획

□ 호주의 퇴직연금은 1992년 퇴직연금보장법(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Act)을 통해 도입된 의무납입 민간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 기업은 18세에서 70세 사이로 월 450호주달러 이상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세전 급여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납입
- 의무납입률은 최초 5%에서 차츰 증가하여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세특례규정으로 인해 급여의 평균 10%에서 20%까지 자발적 추가납부가 보편화되어 있음
 - 의무납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급여상승분의 일부가 기업의 납입금에 포함됨
- 퇴직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며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급여 선택 가능
 - 정부는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연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노령연금과 달리 인플레이션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지 않아 대부분 가입자들이 일시불을 선호

- 퇴직연금 펀드는 운용주체별로 다음의 5가지로 구분되며 2009년 6월 기준으로 소매펀드와 산업펀드의 가입자 비율이 전체의 82.7%를 차지함
- 기업펀드(corporate fund): 특정 기업체 기업주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
 - 산업펀드(industry fund): 특정 산업의 기업주들이 만든 펀드
 - 공공부문펀드(public sector fund): 주정부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가입대상으로 DB형으로 구성되며, 일시금 또는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한 급여를 제공
 - 소매펀드(retail fund): 은행이나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용펀드로 전문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
 - 예외펀드(excluded fund): 5명 미만의 가입자로 구성되는 펀드로 소규모 가족회사 등이 주로 가입

<표 IV-11> 호주 퇴직연금의 유형별 현황

		펀드 수	가입자 수	비율
펀드유형	기업펀드(Corporate fund)	226	661	2.1
	산업펀드(Industry fund)	70	11,213	35.0
	가계펀드(Private sector fund)	40	3,002	9.4
	소매펀드(Retail fund)	169	16,376	51.2
	소형펀드(Small fund)	393,611	754	2.4
운용형태	DC형	393,910	19,190	60.0
	DB형	35	669	2.1
	혼합형	171	12,147	38.0
총 계		394,116	32,006	100.0

주 : 2009년 6월
 자료: APRA

□ 급여의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s: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s: DC)이 있으며, 호주 퇴직연금의 운용형태로는 DB형보다 DC형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⁵³⁾

— DB형보다 DC형이 선호되는 이유는 재정적 부담으로 고용주들이 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들 역시 투자수익률이 높은 DC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

□ 정부가 세금우대·연금 조기인출의 차단·연금선택제(Superannuation Fund Choice)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지원

— 퇴직연금의 납입금, 운용소득 및 연금급여에 관한 세금우대혜택은 호주 내 최고 수준으로, 호주의 평균적인 소득세율⁵⁴⁾은 31.5% 수준이나 퇴직연금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50,000호주달러까지 15%의 최저세율이 적용

•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전액을 손비 인정하며, 60세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혜택 적용

53)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나,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함

54) 2006-2007년도 호주의 거주자 소득세율(의료보험료 부담(1.5%)은 제외)은 과세소득 0-6,000호주달러(0%), 6,001-34,000호주달러(15%(A\$6,000 초과분)), 34,001-80,000호주달러(4,200+30%(A\$34,000 초과분)), 80,001-180,000호주달러(18,000+40%(A\$80,000 초과분)), 180,000호주달러 초과(58,000+45%(A\$180,000 초과분))임

- 퇴직연금 계좌간의 자유롭고 간편한 이동을 보장⁵⁵⁾하는 대신 조기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장기 투자를 유도
 - 조기인출은 심한 재정적 고충을 겪는 상황 등 엄격한 제한 하에서 허용하며 55세 이전에 일시금을 인출할 경우 30%에 이르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
 - 2005년에는 연금선택제를 도입, 근로자 개인이 직접 투자대상 및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금 운용사간의 경쟁 및 운용비용의 절감을 유도
 - 이전까지는 고용자나 노동조합 차원에서 펀드를 선택해 운용해 왔음
-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은 호주 내 건전성 감독기관인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gency)와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기관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담당
- 납입금 납부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률 창출이 가능
 - 주식, 부동산,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약 70%를 차지

55) 2007년 연금개혁으로 연금계좌 이전 혹은 통합 시 처리기일을 30일로 단축하였으며, 복수의 연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통합을 원하는 계좌가 있는 기금에 서류를 제출하는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가능

<표 IV-12> 호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현황

투자자산	비중
국내주식	29%
해외주식	23%
국내채권	11%
해외채권	6%
부동산	10%
현금	9%
기타	13%

주 : 2009년 6월
 자료: APRA

- 1992년 의무납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가입자와 퇴직연금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호주 자산운용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됨
 - 제도 도입 전의 자발적 퇴직연금 가입률은 높지 않았으나 도입 이후 10년간 가입근로자의 비중이 두 배로 증가
 - 퇴직연금 운용자산규모는 2008년 3월 현재 약 4조 2,000억 호주 달러에 달하며 이는 호주 전체 금융자산의 18%, 전체 운용자산 규모의 60%에 해당
 - 퇴직연금의 운용자산규모는 1992년 의무납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기에 약 1,540억 호주달러였으나 2008년 현재 약 8배 증가
 - 호주의 총 운용자산규모는 2007년 말 기준으로 1조 1,930억 달러로 세계 4위, 아시아 1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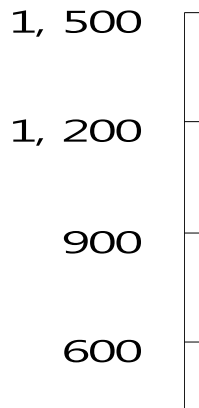
<표 IV-1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가입자 변화

퇴직연금보장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전체	정규직	일용직
도입 전(1992년 말)	40%	47%	9%
도입 후(2000년 말)	88%	95%	72%

자료: APRA(2008)

<그림 IV-1> 호주 퇴직연금 자산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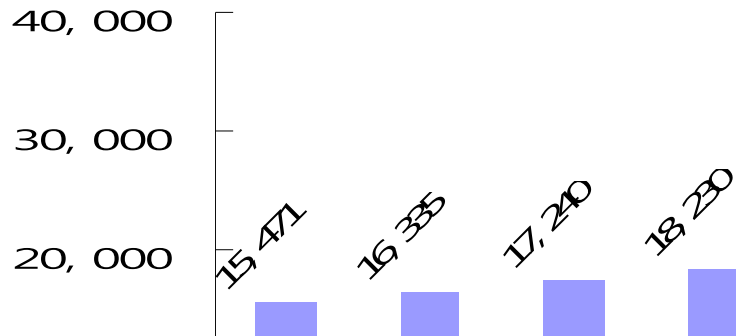
(십억달러)



자료: APRA

<그림 IV-2>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자료: APRA

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역시 호주와 유사한 3층 보장체제의 구조

- 1층(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법정연금
- 2층(퇴직연금):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
- 3층(개인연금): 임의 가입
- 1층만 공적연금을 두고 2층부터 사적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호주와 동일한 구조를 가졌으나, 호주의 경우 2층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의무납입토록 함으로써 공적연금을 보완

- 한국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을 통해 도입
 -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하고,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
 -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인 미만의 영세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기업의 일시금 지급 부담이 가중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며 강제성이 없으며, 특히 노사합의 하에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나, 세계를 통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 중⁵⁶⁾
 - 기업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납입률은 퇴직금과 DB형, DC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임금총액의 1/12 수준
 -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규모를 점진적 축소·폐지
 - 2008년 35%, 2009년 30%: 이후 매년 5%씩 하향조정 할 예정

56) 노동부(2008)

110 금융위기 이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변화 및 시사점

—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확대 (240만원→30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사내에 적립할 경우 동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

□ 호주의 퇴직연금이 다양한 자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투자대상과 투자한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존재

— DB형은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되나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주식 직접투자 한도를 30%이내로 정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

— DC형의 경우 주식의 직접투자가 금지되는 등 DB형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강화

— 또한 전체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DB형이 70%인 반면, DC형은 40% 까지로 더욱 엄격히 제한

<표 IV-14> DC형 및 IRA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
개별 투자	<주식 등에 대한 투자> - 국내·외상장주식(투자회사주식은 제외) - 유가증권예탁증서 - 주식형(주식60%이상편입가능) 간접투자증권 - 혼합형(주식40~60%편입가능) 간접투자증권 - 주식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후순위채권 - 추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최대손실범위원금의10%이상) - 파생상품 간접투자증권 등 - 부동산·실물·특별자산간접투자증권 - 고위험채권 투자 간접투자증권	투자 금지
	<외국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 투자증권 등	30%
집중 투자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등 제외)	30%

주 : 1) DC형과 IRA에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변액보험 등)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가능

2)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표 IV-15> DB형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
개별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 국내·외상장주식(투자회사주식은 제외) - 주식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 사채) - 후순위채권 - 추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최대손실범위 원금의10~40%)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30%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간접투자> -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 파생상품 간접투자증권(원금손실 범위가 10%~40%이내) - 부동산·실물·특별자산 간접투자증권	50%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간접투자> - 혼합형간접 투자증권 -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증권 - 주식형, 혼합형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증권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50%
집중 투자	동일회사 발행 주식(투자회사주식 제외)	10%
	동일법인발행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5%
	동일 계열 기업군 소속기업 발행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15%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 2009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중 8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한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DB형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4%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DC형도 최근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66%로 실적배당형의 2배가 넘음

<표 IV-16>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방법별 적립금 비중

(단위: %)

구분	DB	DC	기업형 IRA	개인형 IRA	전체
원금보장형	94.0	66.2	84.5	85.6	85.9
실적배당형	4.8	31.9	14.8	13.1	12.8
기타	1.2	1.9	0.7	1.3	1.3

주 : 2009년 8월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 제도 가입 유형별 분포를 보면 DB형 가입근로자가 DC형 가입근로자의 2배

— 그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은 최종급여가 안정적인 DB형을, 도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장은 DC형을 선호하기 때문

<표 IV-17> 국내 퇴직연금의 제도 가입 유형별 분포

구분	합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1,428,696	928,748	426,978	65,072	7,898
(비율, %)	(100)	(65.01)	(29.89)	(4.55)	(0.55)

주 : 2009년 8월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 2008년 4분기의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약 0.88%로 여타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수익률 = 현재 잔고/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총액

- 근로자 노후적립금의 과다 위험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DC형 주식 직접투자 금지, 주식 40%이상 펀드 가입 금지 등)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지나친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여금납부, 기금운용수익 발생, 퇴직연금수령 단계에 각각 존재하나 호주의 적극적인 과세혜택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
 - 기여금납부시
 - 사용자 납입분은 손금 산입, 근로자 납입분은 소득공제
 - DC형에 한해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운용수익 발생시
 -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 퇴직연금수령시
 - 연금수령: 연금소득금액 산출 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하며 연금소득공제 적용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 즉,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세제는 EET형(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면세효과, 기금운용 수익 비과세, 연금수령액에 과세)이라고 할 수 있음⁵⁷⁾
 -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 법정 최소세율을 적용하고 60세 이상 요건을 만족하고 수령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하는 등 적

57) EET(Exempt-Exempt-Taxed)

극적인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퇴직연금시장을 활성화하였으나 아직 국내 세제는 미비한 수준임

<표 IV-18> 호주와 한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과세 시기		호주	한국
부담금 납입	사용자 납입분	손금 산입	손금 산입
	근로자 납입분	15% 최저세율 적용	소득 공제
퇴직급여 수령	연금 수령	60세 이상 수급 시 비과세	연금소득공제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B형은 허용되지 않고 DC형이나 IRA형태의 가입자에 대해 주택구입, 본인과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범위가 포괄적이고 범칙금 부과 규정도 없어 상대적으로 중도인출이 용이함

- 퇴직연금 감독을 금융감독당국이 맡고 있는 호주와 달리 한국의 경우 노동부가 중심이 되고 금감원과 기획재정부가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형태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 기획, 법령 해석 등의 업무 수행

- 노사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 심사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 담당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심사에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의 범위와 투자한도 설정, 약관심사 등의 여러 가지 감독업무 수행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 지원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18.73%⁵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말 한국의 금융자산 총계는 약 8,665조 원으로, 이중 자산운용업⁵⁹⁾은 약 432조의 규모로 전체 금융자산에서 약 5%를 차지함

— 자산운용업 내에서 국민연금⁶⁰⁾과 퇴직연금의 운용자산은 약 138조원으로 32.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국민연금 (약 135조원)이 31.46%, 퇴직연금(약 3.5조원)이 0.81%임

58) 2009년 8월 현재,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18.73%인 총 1,428,696명

59) 자산운용업 규모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운용자산 총계에 국민연금의 직접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자산운용업 규모=운용자산 총계(금융투자협회 제공)+국민연금(직접투자)

60) 국민연금의 직접투자액은 주식 직접투자 금액과 채권 직접투자 금액을 합한 것으로 대체투자와 단기투자의 직접투자 금액은 합산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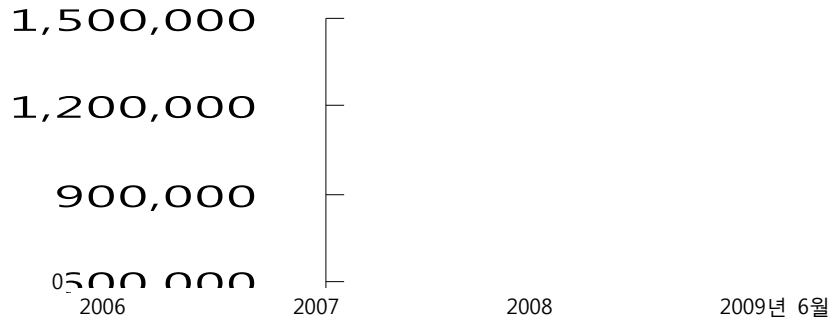
<표 IV-19> 국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수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	1,428,696 (100)	928,748 (65.01)	426,978 (29.89)	65,072 (4.55)	7,898 (0.55)	
업 권 별	은행	858,603	503,458	287,374	63,261	4,510
	생보	285,724	234,648	46,934	1,628	2,514
	증권	212,540	139,343	72,684	117	396
	손보	71,829	51,299	19,986	66	478

주 : 2009년 8월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그림 IV-3>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표 IV-20> 한국의 금융자산

(단위: 십억원)

	금융자산 총계	자산운용업 규모(비중,%) ¹⁾	연기금 (비중,%) ²⁾		
			국민연금 (비중,%)	퇴직연금 (비중,%)	퇴직연금 (비중,%)
2005년	6,211,575	409,878 (6.60)	186,811 (45.58)	186,798 (45.57)	14 (0.00)
2006년	6,947,403	409,421 (5.89)	45.58 (40.35)	164,672 (40.22)	538 (0.13)
2007년	8,061,348	488,136 (6.06)	154,725 (31.70)	152,840 (31.31)	1,885 (0.39)
2008년	8,665,785	429,133 (4.95)	138,466 (32.27)	134,998 (31.46)	3,468 (0.81)

주 : 1) 금융자산 총계 대비
2) 자산운용업 규모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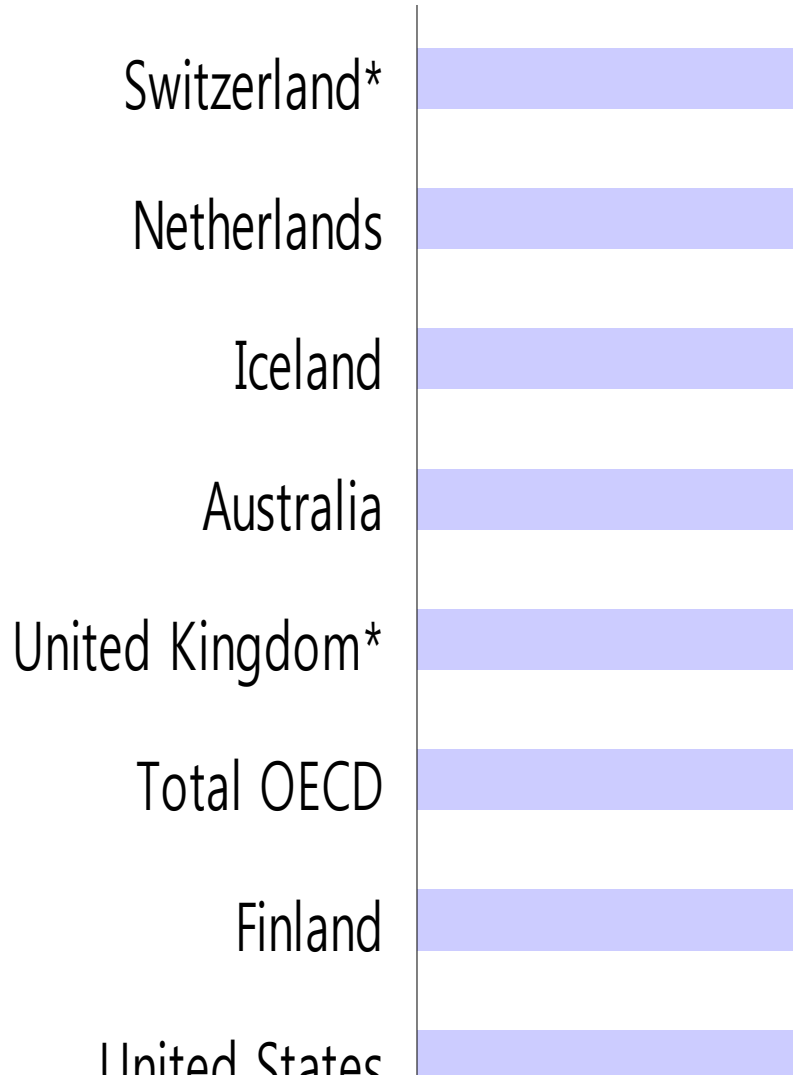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노동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자산운용업 발전전략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의 경우 전체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자국 자산운용업의 직접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던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운용자산 내에서의 비중이 약 1%에 머무르고 있음

- 2008년 기준 OECD 30개국의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대비 평균 63.4%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3% 수준에 불과
- 퇴직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한국의 경우 주식의 비중이 2.4%에 불과해 OECD 내 최저 수준(OECD 평균 41.1%)으로 지나치게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

<그림 IV-4> OECD 국가의 GDP대비 연금자산 규모(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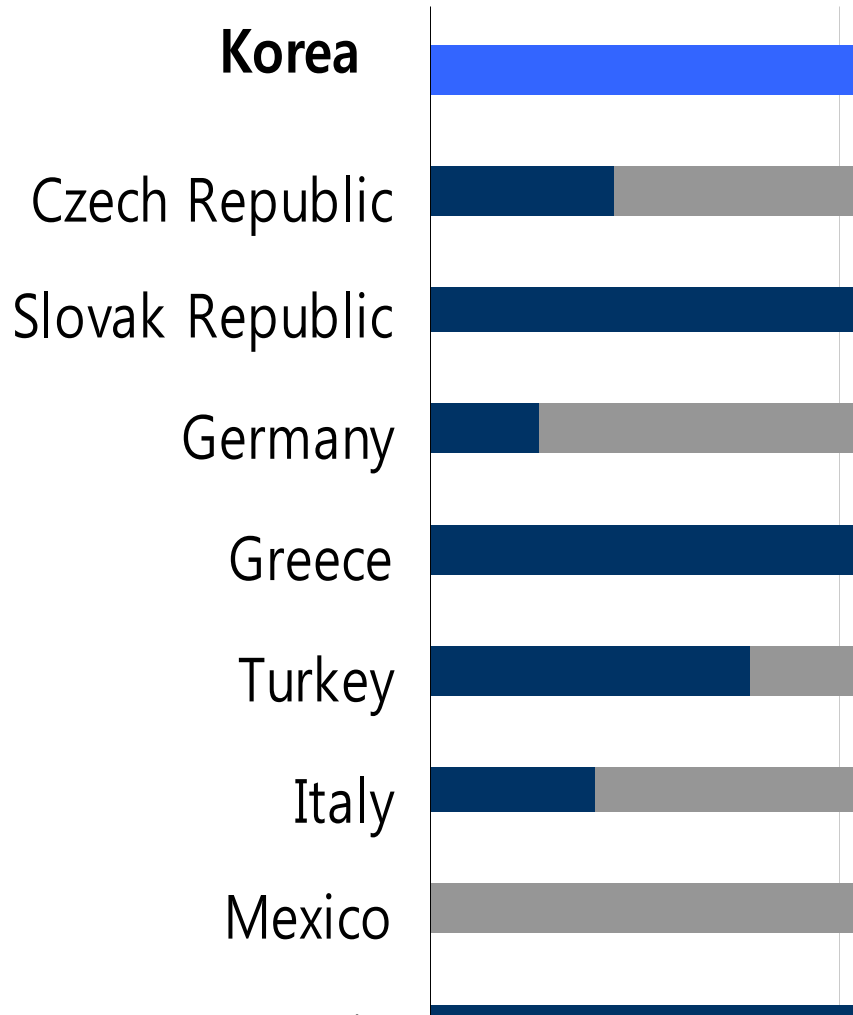


주 : 1) Total OECD는 전체 자산으로 가장평균한 OECD 국가 연금자산의 GDP 대비 비중

2) * 2007년 통계치 반영

자료: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그림 IV-5> OECD 국가 연금펀드의 자산배분(2008)



주 : 1) 모든 통계치는 개인연금에 한정됨
2) * 2007년 통계치 반영
자료: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 그러나 현재의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의 지급여력을 고려할 때 국내의 퇴직연금 규모 역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퇴직연금의 성장을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의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지적됨⁶¹⁾

- 현행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
- 타기업의 가입상황을 보고 차후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도
- 세제혜택의 부족
-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에 따른 기업주 및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
-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 미흡
- 이 외에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선택과 이후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과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높은 선호를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8월에 발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입자별 복수퇴직연금제도 및 복수사용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근로자 선택의 폭을 확대

61)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2006), 조사대상: 퇴직연금 도입 150개사, 미도입 410개사

- 가입자별 복수퇴직연금제도란 개인이 DB형과 DC형에 동시에 가입하는 제도이며, 복수사용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란 적립금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를 간소화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대신 담보대출요건을 완화
-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하여 적립금의 과부족분 발생시 이를 충당하도록 의무화
- 퇴직연금제도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신설사업장의 경우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
 - 현행 IRA형 퇴직연금에 자영업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가입자가 본인부담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 중단 절차, 사용자의 제도 변경폐지 및 중단 절차 등 관련 제도를 보완
- 이 외에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 중
 - 단, DC형 추가불입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 방안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제외

- 한편, DC형의 경우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이 40% 이하인 간접 투자상품에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가입자 선택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자산운용 수요 유발효과 역시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
 - DB형의 경우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DB형의 성격상 주식 투자 비중이 높기 어려움
 - 결국 DC형에 대한 현행 투자제한이 유지된 채 가입자별 복수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복수퇴직연금 선택 유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민조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이러한 제한 완화를 반대하고 노동부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

- 또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요건으로 여전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퇴직금의 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이전보다 오히려 퇴직금 재원사용 제한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특히 담보대출은 노후 보장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허
 - 한국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요건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

-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
 - 보스턴 대학 은퇴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 금융교육을 받은 그룹에 비해 퇴직연금 제도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3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⁶²⁾
 - 이는 비록 미국 내 결과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 부족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신성장 전략의 채택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국가들은 금융위기 발발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을 발굴·제시하는 것을 확인
- 호주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중심지 전략의 새로운 방향으로 탄소거래허브(carbon trading hub)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탄소거래허브 전략은 시드니가 속한 New South Wales의 주지사 Morris Iemma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호주 내에서는 호주증권거래소를 기반으로 중심지 역할을 수행

62)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07)

- 특히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거래 인프라도 완벽히 구비된 상태

- 또한 호주 정부는 역내 자산운용업 허브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펀드관련 조세혜택 방안을 준비
 - 호주 정부는 2008년 7월 비거주자의 호주 내 부동산 및 인프라 펀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고, 3년 후 7.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함
 -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의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17% 수준으로 지역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 싱가포르의 금융위기 이후 금융중심지 전략은 크게 1) 국제정합성 제고 2) 지역특화 경쟁력 유지 3) 신성장 전략군으로 이슬람금융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산운용업 특화허브 육성전략 강화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며, 특히 대형 헤지펀드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대체투자 등의 새로운 자산운용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기관투자자 30인 이하의 중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조항에서 면제하는 등 중소형 헤지펀드의 중심지로서는 자리잡아가고 있는 반면 대형펀드의 경우는 홍콩에 상대적 열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홍콩과 견주었을 때 싱가포르의 조세혜택, 간편한 펀드등록절차, 낮은 인프라 비용 등 업무 절차상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점차 대형 헤지펀드의 싱가포르 진출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또한 대체투자 관련 펀드 유치를 위해 관련 라이선싱 절차를 간소화한 면제조항을 발효
-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새로운 금융중심지 목표로 설정하고, 이슬람금융 육성을 위해 관련 법·규제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각종 세제 지원 혜택도 마련하고 있음
- 이슬람금융 유치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통적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세제도 등 개정을 실시함
 - 또한 유인책으로 샤리아 합치 펀드운용 및 대출, 보험 상품 등에 대해 5% 경감세율을 적용
 - 싱가포르거래소는 세계최초로 샤리아에 부합하는 항목들로 구성된 이슬람지수를 출범하였으며, 2009년에는 제6회 이슬람금융서비스 총회를 싱가포르에서 유치
- 아일랜드는 유럽 내 펀드서비스 중심센터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
-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요구, 동유럽의 저비용 금융센터의 등장,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수많은 국가들의 진출 등 펀드서비스 중심지로서의 더블린의 위상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산재하여 있음

- 이에 아일랜드는 자국의 높은 수준의 사무·수탁 분야의 전문 인력, IFSC를 통한 수준 높은 인프라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저비용 사무수탁서비스로서의 입지를 넘어서 헤지펀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펀드서비스 업계에서의 위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의 목표 아래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한 구체적 목표설정이 필요
 - 이는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대적 이점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중앙정부는 새로운 전략 설정에 있어 전반적인 금융산업 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한국의 특·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금융중심지 신성장전략으로는 “파생금융상품의 허브”로서의 기능 특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은 KOSPI 주가지수 선물·옵션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미 아시아 내 파생금융상품 강국으로서의 발판을 보유
 - 그러나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정량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지수옵션에 한정되어 있어 금리·외환 등 기타 시장의 육성을 통한 종합 발전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금융상품은 금리 관련 상품이며, 국제자본의 이동 증가와 함께 외환 관련 상품 또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세계 최대 조선업 시장 및 8위 규모의 해운업 규모를 바탕으로 “선박금융의 허브”로 특화전략 수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조선업 및 해운업의 세계적 위상과 전 세계 약 3만 개 이상의 해운기업의 활발한 활동 등 이들 기업의 자금수요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울산과 거제사이, 세계 유수의 조선소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선박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증권선물거래소 본부와 선물시장본부가 위치한 부산은 해운 관련 선도·선물 거래수요 확대와 더불어 관련분야의 파생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확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V. 정책적 시사점

1. 자산운용업 육성 전략의 지속적 추진
2. 클러스터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3. 금융과 실물경제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4.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 및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틀
5. 적극적인 해외진출 필요성

V. 정책적 시사점

1. 자산운용업 육성 전략의 지속적 추진

- 자산운용업의 발전은 무엇보다 국내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용하여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며, 금융중심지 육성은 이러한 자산운용업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는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등 아시아의 고성장 국가들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한발 앞선 금융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도 필요

- 이러한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환보유고 등 국내의 자산 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사례에서도 퇴직연금의 성장이 자국 자산운용업 발전에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 보장과 자산운용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C형에 대한 투자대상의 범위 확대와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요건 강화가 필요
 - DC형의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제한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준
 - 현재 주식 투자비중 40% 미만의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가 허용

— 중도인출에 대한 느슨한 요건 역시 현재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퇴직연금의 매력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

□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 비중 확대를 유도하여 자산운용 수요를 촉진할 수 있음

— 외국 연기금의 경우 외부위탁운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

- 미국 상위 50개 공적 연금: 57%(국내 연기금: 16%)

<표 V-1> 국민연금 위탁투자 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내	주식	3,517	5,674	9,395	10,592	17,848	14,294
	채권	0	4,117	5,136	5,422	8,078	8,962
해외	주식	157	343	581	1,264	5,381	5,668
	채권	598	4,305	11,961	16,429	17,363	9,214
기타	240	438	780	2,168	5,406	8,802	
계	4,512	14,877	27,853	35,875	54,077	46,941	
비중(%)	3.87	10.55	16.99	18.92	24.63	19.9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물론 이러한 연금위탁운용 결정은 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위탁운용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클러스터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 방안은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
 - 뉴욕, 런던 등 주요 금융중심지들의 경우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회사들이 밀접한 지역인 금융클러스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됨
 - 아일랜드, 두바이 등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해온 국가들은 핵심전략으로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단시간 내 금융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이룩함

- 현재도 금융중심지 육성을 지향하는 일부 국가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호주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드니 외곽지역을 주요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계획을 진행 중
 -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개의 국제업무동과 2개의 주거·레저동을 포함한 주요 국제금융업무단지를 조성 중

- 서울의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및 부산의 문현지구의 개발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 상승이라는 범세계적 트렌드와 일치
 - 여의도에 건립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는 호텔을 포함 주거·레저·업무를 포함한 종합형 단지로서 현재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단지의 콘셉트와 부합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법에 근거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한 클러스터 지원 대책은 지속적으로 진행
 - 금감원 내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개소되어 금융중심지의 발전·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의 통로의 역할 및 금융중심지 홍보 등 대외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외 IR 및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홍보 역할 등을 수행
 - 금융위원장 주재로 실시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2011년 6월)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클러스터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집적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 및 편의성 증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은 타산업군에 비해 집적에 의한 업무의 효율이 배가되는 속도가 큰 산업군으로, 클러스터의 인위적 조성 시에는 이를 고려한 업체 선정 및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
 - 집적효과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후선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국제금융거래라는 소기의 목적행위 대상에 대한 편의성 측면에서의 효율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3. 금융과 실물경제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 금변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을 통해 과도한 금융업 위주의 금융도시 성장전략은 위기에 대한 탄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과도한 금융중심지 유인책을 실시한 국가에서는 외자유입이 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몰려 외국기업의 이탈 또는 금융업계의 위축이 발생할 경우 국내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 대부분의 신흥 금융중심지 국가는 실물경제 부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금융서비스산업을 자국의 유일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하여 파격적인 조세혜택 및 규제완화를 제시

-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형성된 금융중심지의 입지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와 더불어 약화될 전망
 - 국제사회는 G-20를 중심으로 거시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규제차익 및 조세차익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금융중심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음
 - 이에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느슨한 금융감독 적용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육성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향후 새롭게 등장할 금융중심지는 실물과 금융의 적절한 균형, 국제 제도에 정합한 투명한 관리·감독체계 보유, 매력적인 금융서비스와 수익창출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GFCI 금융도시 순위조사에서 서울, 동경 등 실물 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센터의 순위 상승은 현재 국제금융업 종사자의 금융센터 선호도에 있어 실물부문의 기여도가 상승 중임을 반영
 - 또한 조세인센티브 등을 전략적 강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외형 금융센터의 경우, 국제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이러한 조세차익·규제차익을 앞세운 전략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

4.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 및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틀

-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 국들은 급변 위기를 자국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 제고의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2009년 1/4 분기 8.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또한 아일랜드 경제의 중요한 축인 IFSC의 수익감소가 법인세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초래
 - 호주의 경제 상황은 기타국에 비교에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 역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실정

- 이렇듯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중심지 추진국가들은 금번 위기를 자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판단하고 각종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력하게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
 - 호주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국제금융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의 하나로 승계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금융위기 이후 다음의 다섯 가지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금융중심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혜택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 금융규제 및 체제를 유지·보수 하며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
 - 복잡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양하고 단순한 구조의 상품 등 위기 이후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산업을 활성화
 -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함
 -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금융산업개발펀드(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를 조성하는 등 기존의 육성정책을 유지

-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가장 심했던 아일랜드는 향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목표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으나, 경쟁력 유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되 금융위기로 드러난 자국 금융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혜택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심해지자, 국내기업에 까지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국내외 간의 차별성을 없애려하였으나, 이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폐해가 심하게 나타남
 - 현재 아일랜드 내에서는 관련 법체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와 금융중심지 경쟁력 유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음

- 기존 금융중심지 국가들이 제도강화를 통한 거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이 우리에게도 기회의 시기로 판단됨
 - 과도한 규제완화 및 이윤추구로 인한 리스크 노출, 고수익만을 노린 복잡한 구조화상품의 남용 등 소위 금융선진국들이 자체적 시스템리스크관리 미흡에 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이 후발주자인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함
 - 또한 규제·조세 차익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던 조세회피형 중심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확고해진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강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또한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금융 위기 이후 강화되는 국제금융규제의 움직임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규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의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시 해온 영국과 미국은 위기 발발 이후 터너보고서(Turner Review, 영국, 2009년 3월 발표) 및 금융규제개혁(Financial Regulatory Reform, 미국, 2009년 9월 발표) 방안을 통해 자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체계 강화를 천명하고 있음
 - 반면, 여타 선진국대비 강도 높은 금융규제와 철저한 건전성 관리로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비교적 건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 금번의 상황을 규제차익을 통한 불공정거래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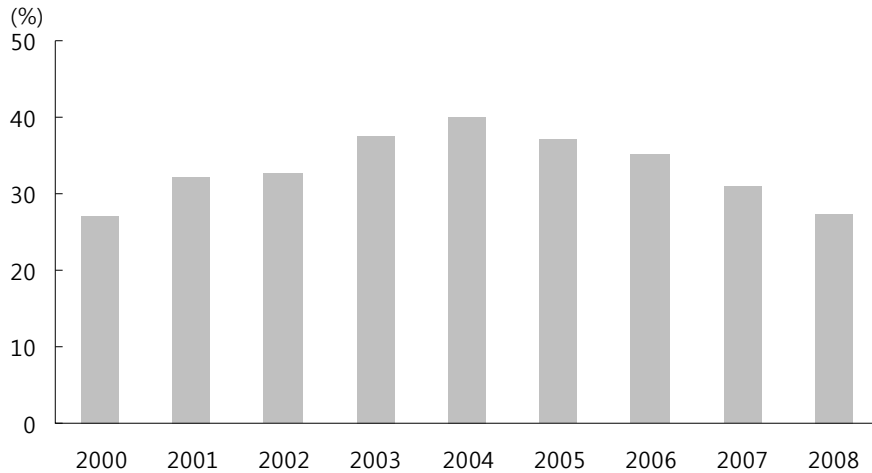
5. 적극적인 해외진출 필요성

- 현재까지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국내 금융시장 인프라 및 규모 확대를 통한 해외기업 유치전략으로 요약됨
 - 이는 금융산업을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국내 유치를 통한 서비스산업 수출효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경제 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독려하는 방향의 전략임
 - 궁극적으로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의 금융중심지를 거점으로 동북아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특히 주식시장의 외국인자본유입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진출도 크게 증가
 -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자본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한때 상장주식의 외국인 비중이 40%를 상회하여 외국자본 비중이 세계에서 4번째를 기록하기도 함⁶³⁾
 - 2009년 6월 현재 29개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 중에 있으며, 이들 총 1,080명의 임직원을 보유
 - 반면 직접투자를 통한 외국자본유입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하여 2006년 고정자본형성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1.9%에 불과
 - 이는 세계평균 12.6% 및 동아시아 평균 10.1%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63) 2003년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외국인 비중은 헝가리, 핀란드,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제금융센터(2003)

<그림 V-1>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투자자 비중 추이(시가총액)



자료: KRX

□ 반면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함

- 2008년 6월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수 125개, 해외자산 비중 3.4%로 기타 선진국 대비 매우 부족함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수는 IMF 이전 수준인 257개소(1997년 말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미국 상업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은 약 12% 수준
- 국내자산운용사 및 증권사는 최근 해외점포 개설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규모 등에 있어 미흡한 수준이며, 특정 국가(베트남 31개사 등)로의 쏠림현상,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 전반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6월 기준 증권사 해외 점포수는 34개, 자산운용사 해외 점포수는 16개사

- 일반 국내기업의 경우 해외자금조달 수요의 증가로 해외 IPO, 채권 발행 등 국제금융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증권사들의 역량 부족으로 이들 업무를 외국계증권사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
 - 2008년 국내기업의 해외발행채권주관사를 살펴보면 HSBC 등 외국계 5개회사가 전체 시장의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금융회사의 국제화 또한 필수적 요소
 - 국내금융회사는 규모, 인력, 경영능력, 경험 등 전분야에 걸쳐 선진국 금융회사에 비해 열위에 있는 상황
 - 금융중심지의 육성은 궁극적으로 국내금융회사와 해외금융회사의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며, 이에 국내금융회사는 해외진출을 통해 효율성 제고, 리스크분산으로 수익성 증대, 선진 리스크관리 및 운용기법 습득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또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인 외환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도 자본의 유·출입의 고른 성장이 필요
 - 리스크분산의 측면에서도 지역적 리스크 집중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자산배분의 국제화를 통해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분산의 동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금번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나친 자본 유·출입의 불균형은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

Appendix

<Appendix>

UK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 the future

- 2009년 5월 영국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의 요청에 의해 민관 공동으로 런던의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 유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 “UK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 the future”를 발간
 - 주요 내용은 금융산업의 경제 공헌도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 제안, 현재 진행 중인 EU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 경쟁력 있는 과세 체계와 금융인력 양성 방안 등

<배 경>

- 금융서비스 산업은 영국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런던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클러스터이펙트(cluster effect)가 런던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1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1인당 부가가치가 영국 평균의 2배에 달하며,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대비 약 8%이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이릅니다

-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의 불균형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은 약 14%인 반면, 금융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은 약 5~8%이며 이는 미국·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신흥국가들 보다는 낮은 비율임

- 영국의 산업은 금융과 비금융 부문간에 복잡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국제화로 인해 더욱 밀접해지는 경향이 있음
 - 지난 20년간 급격한 프라이빗이쿼티(Private Equity)산업의 성장은 영국 경제와 금융부문의 가치사슬에 큰 영향을 미침
 - BVCA(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의 보고서⁶⁴⁾에 따르면 프라이빗이쿼티(Private Equity)산업의 성장은 고용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영국으로의 자금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음
 - 주로 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및 경영컨설팅·법률서비스 등의 금융지원산업이 발전

- 영국 국제금융서비스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명성을 쌓아왔고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왔음
 - 금융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제공해 왔으며, 아시아와 미국 시장 사이에 위치한 영어사용국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EU 내의 다른 금융중심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64) BVCA(2007)

- 영국은 금융서비스산업과 연계된 국제적인 전문성의 본고장으로
서 세계적인 법률·회계 법인의 본사가 위치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영국의 금융서비스산업도 그
로 인한 타격을 피하지 못함
 - 은행산업의 경우 일부가 문을 닫았으며, 보험시장은 투자시장의
변동성과 경기하강으로 인해 투자와 보험료 수입이 모두 감소
 - 자산운용업의 경우 과거 선진국 저축 수준의 증가로 인한 혜택을
받아왔으나 최근 투자수익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법률 등의 전문
서비스도 금융서비스 관련 사업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경기 활황기에 왕성하던 M&A 사업분야의 감소세가 뚜
렷함

〈전 망〉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10~15년간 영국이 국제금융서비스에 있어
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 현재 영국의 국제금융서비스산업은 선도 국제금융센터로서 런던
이 신흥 도전국으로부터 그 지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
 - 그러나 런던은 영국 내 국제금융서비스산업의 관문일 뿐 진정한
강점은 국가 전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과거 금융중심지를 유지
할 수 있었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
한 새로운 전략의 고안·발전이 필요함

1. 국내·외 경제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 수립

- 영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 누리는 혜택을 국내 경제 전반에 축적시켜야 함
 - 경제에서의 금융서비스산업의 역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서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융서비스산업과 경제 간의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유대 관계를 창출하고 산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역적 공급을 강화
 - 지역의 전문 서비스 업과 금융센터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대관계 강화

- 영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는 개방경제와 다른 금융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
 - 영국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교역·교섭을 통해 활발히 활동
 - 정부와 산업계는 영국이 세계금융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유지·증대하고, 다른 금융센터에 유동성과 전문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시장의 인프라 유인을 제공
 - 주요 거래소 구조, 리스크관리 규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경험, 정책,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창출, 공동 투자, 교육 등에 대한 교류를 통해 신흥 시장 경제와 협동해야함

2.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영국의 명성을 재확인

- 금융 및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영국의 강력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영국은 은행위기를 경험하였으며 규제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는 은행위기로 드러난 결함을 보완하여 무너진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은행의 명성을 되찾아야함
 - 영국은 규제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규제에 대한 시각에 대해 다른 국가나 지역의 거래소 감독당국과 개방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야 함
 - 정부는 금융 종사자간의 협동을 독려하고 산업과 공조해야함

- 적절한 감독제도: 세계와 EU의 감독제도 도입과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함
 - 영국은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기준을 형성하는데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와 EU의 감독제도 기준의 도입과 이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국제기준은 일관적이고 정확한 규범으로 이행되어야함
 - 영국의 모든 법령이나 규제는 영국의 국제금융중심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감독과 규제 대책은 각각의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감독구조를 정기적으로 검토
 - 모든 변화는 그 정책이 여전히 적절한지에 대한 측정, 검토, 정기적인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며 기존의 제도들은 적절하게 수정되어야함

-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국내적 기준 도출
 - 국제금융센터로서 영국은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 더 나은 위기 해결 메커니즘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세계정책: 영국의 세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유지 가능하며 경쟁력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강력하고 목적성 있는 합의의 도출
 - 세금 정책은 금융중심지로서의 영국의 핵심적 역할의 유지·확장에 중점
 - 정부와 산업계는 재정 강화와 재정 안정성과 넓은 의미의 경제 및 시장 트렌드에 대한 적절한 반응 사이를 조절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세계는 금융위기를 포함한 환경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안정과 예측가능성임

- 유연한 노동시장을 지원하며 전문성과 교육을 증대
 - 금융서비스산업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
 - 산업계는 금융서비스 인력의 적절한 규모와 전문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야 함
 - 리더십과 전문성의 증진
 - 산업계, 정부, 감독당국, 학계 간의 파견·순환 근무를 증가시켜야 함
 - 산업계는 학생들과 교육기관이 교육과 연구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른 금융센터와의 파트너십 기회 확대

- 일반적인 교육 정책을 통한 금융 지식 증진
 - 금융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
 - 과학과 수학과목에 대한 교육을 장려
 - OJT(on-the-job training: 직장내 교육훈련)을 위해 산업계와 교육당국의 협력이 필요
- 해외인력을 유치
 - 영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센터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전문가들이 그들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는 해외 고급인력이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커리어를 쌓는데 유리하도록 지원

□ 미래 10~15년의 도약을 위한 효과적인 감독체계의 혁신

- 영국의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금융의 필요성과 신흥 시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금융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지위는 감독시스템과 다른 유인들로 뒷받침되고 있음
 - 산업계는 국제금융서비스를 위한 금융인프라에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정부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금융서비스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책임감 있는 금융 혁신은 효과적인 감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감독체계는 책임감 있는 금융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어야 함

- 감독당국과 산업계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수행해야 함

3. 효과적인 수행

-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영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발전을 위한 정부·산업계·시장참여자들의 생산적이고 목표의식 있는 논의를 위해 새로운 구조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노력은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함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형철·김민석·김한수·송민규, 2008, 『금융중심지경쟁력 제고방안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Issue Paper 08-02.
- 강형철·김한수·서은숙·송민규·김보영·윤지아·이운재, 2007, 『서울의 금융경쟁력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호주(Australia) 연금제도 조사』.
- 금융감독원, 2009a,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전체, 금융권역별)』 퇴직연금통계.
- 금융감독원, 2009b, 『퇴직연금 가입자수(전체, 금융권역별)』 퇴직연금통계.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 금융전문인력 채용·취업 지원 개시, 보도자료, 2008 (12.4).
- 금융위원회, 2008.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
- 금융위원회, 2008. 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보도자료, 2009 (1.21).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개소, 보도자료, 2008 (9.9).
- 금융위원회,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 2009 (5.14).
- 금융위원회,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08 (6.30).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2008 (3.11).

기획재정부(舊 재정경제부), 제3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보도자료, 2003 (12.11).

기획재정부(舊 재정경제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2006 (11.15).

강유덕 외, 2010, 아일랜드 구제금융의 배경과 위기확산 가능성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0, No.36.

김근태, 2009, 아일랜드 경제위기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09-38호.

김득갑, 2009, 『최근 영국경제의 불안요인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김재철, 2006,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금융기관에 주는 시사점,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금융포럼』 Series 2006-9.

김재철·김철배·차문현·김한수·박진모·박창욱·김보영, 2007,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노동부, 2007,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매뉴얼』.

노동부, 20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명자료』.

노동부, 2009, 『09.8월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퇴직연금통계.

노동부,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보도자료, 2008 (10. 1).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6,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Survey 결과』, PRIMA 세미나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7, 『연금뉴스』 16호.

- 서병호, 2009,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 금융연구원.
- 오용협·백승관·김연실, 2008, 『원화 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용협·조종화·윤덕룡·송원호·이호진·이인형·진익, 2006, 『금융중심지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기환, 2008, 선박금융 특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전략, 『한국경제포럼』 겨울호, 한국경제학회.
- 이석호, 2010,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캡티브보험사 유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 장동구·전승철, 2004, 『홍콩 및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전병목·기은선·정희선·조진권·박임수, 2007, 금융중심지 국가들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 07-07.
- 정윤미, 2009, 최근 영국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동향 및 평가,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제 25호.
- 제주금융포럼, 2008,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금융서비스센터(Ireland Dublin IFSC)와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s)의 개요』, 역외 금융연구 제1권
- Mark Stuart, 2009, 경제위기가 영국 금융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3월호.

<해외문헌>

APRA, 2008, *Statistics :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08*.

Australian Government, 2011, *International Data Comparisons*.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 2009, *Australia as a Financial Centre: Building on our Strengths*.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 2010, *Austrade's 2010 Benchmark Report: Australia A Global Financial Services Centre*.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 2011, *Austrade's 2011 Benchmark Report: Australia-A Wealth of Opportunities*.

Beaumont, C., Cui, L., 2007, *Conquering fear of floating - Australia's successful adaptation to a flexible exchange rate, IMF Policy Discussion Paper 07/2*.

BIS, 2005,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2004*.

Brouwer, G., 1999, *Deregulation and open capital markets: the australian experience before wallis*.

BVCA, 2007, *Private Equity's Impact as a Financial Service*.

City of London, March 2009,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5*.

City of London, September 2009,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6*.

City of London, March 2010,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7*.

Debelle, G., Plumb, M., 2006, *The evolution of exchange rate policy and capital controls in Australia, Asian Economic Papers, 5:2*.

Deloitte, May 2008,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Ireland*.

- Dublin City Council, Nov.2009, *Dublin's IFSC, What can we learn from the International Rankings?.*
- Eurekahedse, May 2010, *The Eurekahedse Report.*
- Finance Dublin, 2009, *The Finance Dublin Yearbook of Ireland's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09.*
- FSA, 2009, *The Turner Review : A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banking crisis.*
- Fraser I., Dublin shrugs off downturn blues, *Fianancail Times*, 2008 (July 21).
- Gallant, P., 1988, *The eurobond market*, Woodhead-Faulkner, New York.
- Garnham, p., Rogers, J.,: UK has nothing to sell, *Financial Times*, 2009(January 21).
- Hedgeweek, 2006, *Dublin Hedge Fund Services 2006.*
- HM Treasury, 2009, *UK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 the future.*
- Holzman, R., Hinz, R., 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The World Bank.
- IFSL, 2008, *Economic Contribution of UK Financial Services 2008.*
- IFSL, 2009,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The UK.*
- IFSL, 2011, *Economic Contribution of UK Financial Services 2010.*
- IMF, Aug. 2009, *Singapore:2009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Staff Statement;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Singapore.*

IMF, June 2009, *Ireland: 2009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and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IMF, Dec.2010, Country Report No.10/366, *Ireland: Request for an Extended Arrangement-Staff Report; Staff Supplement; Staff Statement; and Press Releas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IMF, May 2011, Country Report No.11/109, *Ireland: First and Second Review Under the Extended Arrangement and Request for Rephrasing of the Arrangement-Staff Report; Letter of Intent; Memorandum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Technic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Specific Economic Policy Conditionality(College of Commissioners); Staff Supplement; and Press Releas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Impavido, G., Musalem, A., Tressel, T., 2003, Impact of 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s on securities markets,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948.*

KOPEC, 2009,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Magnus, G., Big banks should be broken up, not taxed, *Prospect Magazine*, 2009(September 2).

Mark, Y., Jeremy, H., 2008, Seoul's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How to become top 20 in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KSRI Discussion Paper Series.*

MAS, 2002, *Positioning Singapore as a Pre-eminent Financial Centre in Asia.*

MAS, 2008, *Annual Report 2007/2008*

- MAS, 2009a, *Annual Report 2008/2009*
- MAS, 2009b,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Singapore.*
- MAS, 2010, *Annual Report 2009/2010.*
- MAS, 2011, *Annual Report 2010/2011.*
- Mastercard Worldwide, 2007, *Mastercard Worldwide Centres of Commerce Index 2007.*
- Mastercard Worldwide, 2008, *Mastercard Worldwide Centres of Commerce Index 2008.*
- McCauley, R., 2006, *Internationalising a currency: the case of the Australian dollar*, BIS Quarterly Review, December 2006.
- McGuire, s., *Forget the Great In Britain*, Newsweek, 2009(August 1).
- Milken Institute, 2009a, *Capital Access Index 2008-Best Markets for Business Access to Capital.*
- Milken Institute, 2009b, *Opacity Index 2009-Measuring Global Risks.*
- OECD, Oct. 2011, *OECD Economic Survey Ireland.*
- Owens, J., Saint-Amans, P., 2009, *Overview of the OECD's work on countering international tax evasion*, OECD.
- Parker, G., *UK watchdog moots 'Tobin tax'*, Financial Times, 2009(August 27).
- Reddan, F., *IFSC banks on fresh approach*, 2009 The Irish Times, 2009(June 8).
- Thomson, A., *George Soros: Britain may have to seek IMF rescue*, The Times, 2009(March 28).

Turner, A., How to tame global finance, Prospect Magazine, 2009 (August 27).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8, International Taxation: Large U.S. Corporations and Federal Contractors with Subsidiaries in Jurisdictions Listed as Tax Havens or Financial Privacy Jurisdiction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 GAO-09-157.

Walker, E. and F. Lefort, 2002, Pension Reform and Capital Markets: are the any (herd) links?, *The World Bank.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0201*

World Bank, 2009, *Paying Taxes 2009 - The global picture.*

Z/Yen Group, 2010,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7, A commentary on Dublin's position*, Dublin City Council—Think Dublin! eSearch Series.

<웹사이트>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노동부	www.molab.go.kr
APRA	www.apra.gov.au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ww.abs.gov.au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	www.treasury.gov.au
Central Bank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f Ireland(CBFSAI)	www.centralbank.ie
Central Statistics Office	www.cso.ie
Deloitte	www.deloitte.com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www.finance.gov.ie
Doing Business	www.doingbusiness.org
Dublin Docklands	www.dublindocklands.ie
European Fund and Asset Management Association	www.efama.org
FinanceDublin	www.financedublin.com
Financial Regulator, Ireland	www.financialregulator.ie
Financial Times	www.ft.com
Finfacts Ireland	www.finfacts.ie
Government of Ireland	www.gov.ie
IFSL	www.ifsl.org.uk
Irish Banking Federation	www.ibf.ie
Irish Fund Industry Association	www.irishfunds.ie
Irish Stock Exchange	www.ise.ie
KPMG	www.kpmg.com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www.mti.gov.sg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www.mas.gov.sg
Newsweek	www.newsweek.com
OECD	www.oecd.org
Prospect Magazine	www.prospectmagazine.co.uk
Reserve Bank of Australia	www.rba.gov.au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www.singstst.gov.sg
Stat Central	www.statcentral.ie
The City of London	www.cityoflondon.gov.uk
The Irish Times	www.irishtimes.com
The 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	www.revenue.ie
The Times	www.timesonline.co.uk
The Z/Yen Group of Companies	www.zyen.com